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다면적 진화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나카무라 모모에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다면적 진화

지도 교수 이 정 환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나카무라 모모에

나카무라 모모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원장 전재성 (인)

부위원장 김종학 (인)

위원 이정환 (인)

국문 초록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 유엔외교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공헌의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1992년 PKO 법 성립 이래, 일본은 유엔 PKO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미일안보와 별개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제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기존의 안보체제에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성격도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중심적 내용은 '미일동맹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일안보 강화의 움직임은 다자안보협력 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새로운 안보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 평화주의'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가 제시되며, 그 기초 아래 다자안보협력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다자안보협력은 특정한 국가,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인도-태평양 시대에는 Quad와 같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배타적 소다자 안보협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미일동맹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대 아베 정권 이후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와는 달리 미일동맹에 포섭되어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안보협력의 포괄적인 성격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ASEAN과의 다자안보협력이 2010년대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과 ASEAN의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일본의 PKO 파견을 계기로 심화되었고, 1994년에는 ARF 같은 ASEAN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대화'도 발전되었다. 그리고 아베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일-ASEAN 다자협력은 중요시되었다. 아베 총리는 Quad 소다자 안보 협력에 더하여 일-ASEAN 협력을 강조했다며, 경제지원과 안보·방위 협력 양면에서 ASEAN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삼았다.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10년대 아베 정권 시기 다자안보협력 정책에 미일동맹 강화라는 외적 균형 전략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며, 균형 전략이 아닌 헤징 전략을 주장한다.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의 성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Quad와 일-ASEAN 협력 두 가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배타적 성격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일동맹 뿐만 아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

하는 포괄적 성격도 혼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 안보협력이 다면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미중 갈등 속 일본의 헤징 전략이 다면적 진화의 원인이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일-ASEAN 협력이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여, 일-ASEAN 양자 및 다자 협력의 발전 과정, 미중 갈등 속 ASEAN 의 입장,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과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일-ASEAN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모색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의 성격을 가진 일-ASEAN 다자협력과 Quad 소다자 안보협력이라는 두 가지 추구를 통해, 일본이 미중 양국에 대한 리스크 헤징을 진행하였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 일본 다자안보협력, 아베 정권, Quad, 일본-ASEAN 안보협력, 헤징 전략, 인도-태평양 시대
학 번 : 2020-23957

* 본 논문작성자는 한국정부초청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을 지원받은 장학생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 검토	3
3. 분석 틀과 연구방법	6
1) 이론적 분석틀	6
2) 연구 과정.....	9
4. 논문의 구성	10
II. 일본 외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변화.....	12
1.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와 새로운 다자안보개념.....	12
2. 다자안보정책 시작과 전개	15
1) 인간안보 규범 수용	15
2) ‘다자간 안보’의 지속적 사용	17
3. 소결.....	21
III. 다자안보협력 정책 변화의 계기 :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유롭고 열 린 인도-태평양’	22
1. 미일동맹이 중심이 된 일본의 다자안보협력	23
1) 적극적 평화주의.....	23
2) 미일 신가이드라인	24
2.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그 변화	26
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소다자 안보협력	26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3 가지 축	29
3) ‘전략’에서 ‘구상’으로 : ASEAN 과의 관계를 설정	32
3. 소결	34

IV. QUAD: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의 중심	36
1. 일-호, 일-인 양자 관계	36
1) 일-호 협력 관계	36
2) 일-인 협력 관계	39
2. 3 개국 협의의 형성 과정과 제도적 발전	42
1) 아베의 대중 견제 안보 협력 구상	42
2) 3 개국 협의의 발전	44
(1) 미·일·호 (日米豪)	44
(2) 미·일·인 (日米印)	46
3. 대중 경쟁 전략으로서의 QUAD	47
1) Quad 의 형성	47
2) Quad 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	51
4. 배타적인 성격의 유동화?	54
V. 일-ASEAN 관계 속 안보협력	56
1.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의 전개 과정	56
2. 제 2 기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안보협력	59
1) 외교관계	60
2) 안보·방위협력	65
3) 경제협력	70
3.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이 가지는 중요성	75
1) 안보적 관점	75
2) 경제적 관점	76
4.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의 입장과 일본의 해징 전략	77
1)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관점(AOIP)’ 발표	77
2) ASEAN 의 우려와 일본의 해징 전략	80

VI. 결론: 아베 정권기 다자안보협력 정책과 리스크 헤징.....	82
1. 미중 관계 속 일본의 리스크 헤징	82
1)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과 미중 ‘신냉전’	82
2)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84
3) 미국과 일본 FOIP의 차이.....	85
2. QUAD와 ASEAN 두 가지 협력 추구.....	86

표 목 차

[표 1] 일본-호주 협력관계의 발전	36
[표 2] 일본-인도 협력관계의 발전	39
[표 3] Quad 국장급 협의 및 외교장관 회담	50
[표 4] 아베 총리의 동남아 방문 실적	60
[표 5] 일-ASEAN 정상회의	64
[표 6] 일-ASEAN 외교장관회의.....	64
[표 7]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및 안보·방위 협력 문서	70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은 일본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성격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 유엔외교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공헌의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1992년 PKO 법 성립 이래, 일본은 유엔 PKO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미일안보와 별개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기존의 안보체제에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성격도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 안보정책 변화 속에서 다자안보협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논문의 큰 목적이다.

2010년대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중심적 내용은 ‘미일동맹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내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목표는 첫째 역지력의 강화와 일본에 대한 위협의 방지, 둘째 미일동맹 강화와 지역안보의 개선, 셋째 글로벌 안보환경의 개선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의 구축이다. 이는, 미일동맹의 강화가 국가안보 목표이자 일본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재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이로써 미일동맹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되었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경험한 이래, 일본은 미일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지만, 2010년대 아베 정권에 들어서 미일안보협력은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러한 미일안보 강화의 움직임은 다자안보협력(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새로운 안보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 평화주의’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가 제시되며, 그 기조 아래 다자안보협력이 추진되었다. 아베 정권은 대외 안보협력의 다층화를 목표로 안보협력을 확대시키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시한 것이 호주, 인도와의 협력관계였다.¹ 2014년 7월 일본과 호주는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특별한 전

¹ 佐竹知彦, “安倍政権下の日本の防衛・戦略態勢,” 『国際共同研究シリーズ』 12-1(2015), p.19.

략적 파트너십'으로 강화하는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양국간의 안보·방위 협력은 보다 긴밀한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인도와는 2014년 1월에 '일본·인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국간 안보협력 관계의 확립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2013년에 ASEAN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안보협력도 중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 건설을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 인도 및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FOIP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전략대화체인 Quad가 그 중심핵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일·호·인 4개국간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면서 대두되었다. "Quad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은 과거와는 대별될 정도로 그 빈도와 내용 모두에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² "이는 양국 혹은 삼국 간의 군사회담과 연합훈련의 증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³ 이러한 일본의 Quad 중심 다자안보협력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고 하는 배타적인 안보전략이다. 구조적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축과 호주·인도와의 협력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⁴ 실제로 일본과 인도, 호주와의 협력은 미국을 포함한 미·일·호, 미·일·인도 틀에서의 삼자 협력(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이 기반이 되어 있다. 즉,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며, 미일동맹 강화를 토대로 3자 혹은 4자로 구성된 소다자(mini-lateral) 안보협력이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 변화 속에서도 유엔외교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에 유엔 PKO를 중심으로 대두했으며, 미일동맹과는 다른 차원, 다른 범주의 문제로 차별화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 점에서 1990년대 다자안보협력은 특정한 국가,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inclusive)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² 김관옥, "현실주의 외교안보전략으로서의 연성편승정책 -일본,인도,호주의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20권 1호 (2012), pp. 153-174. 재인용: 윤도원, "대외안보 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여," 『인문사회과학연구』 61호 (2018), p.38.

³ 윤도원, 2018, p.38.

⁴ 윤도원, 2018, p.39.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Quad와 같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배타적(exclusive) 소다자 안보협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미일동맹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대 이후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와는 달리 미일동맹에 포섭되어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안보협력의 포괄적인 성격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ASEAN과의 다자안보협력이 2010년대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과 ASEAN의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일본의 PKO 파견을 계기로 심화되었고, 1994년에는 ARF 같은 ASEAN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대화’도 발전되었다. 그리고 아베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일-ASEAN 다자협력은 중요시되었다. 아베 총리는 Quad 소다자 안보 협력에 더하여 일-ASEAN 협력을 강조했으며, 경제지원과 안보·방위 협력 양면에서 ASEAN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적극적 평화주의와 FOIP가 출범한 2010년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정책은 1990년대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논문은 Quad와 일-ASEAN 다자안보협력 두 가지 비교분석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PKO 활동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⁵ “탈냉전기 인종, 종교, 민족

⁵ 대표적인 기존연구로써 아래 연구들이 있다. 大芝亮(編), 『日本の外交 第5巻 対外政策課題編』, (東京:岩波書店, 2013); 大江博, “新しい日本外交-「人間の安全保障」の観点から,” 高橋哲哉, 山影進(編), 『人間の安全保障』, (東京大学出版会, 2008); 福島安紀子, 『人間の安全保障-グローバル化する多様な脅威と政策フレームワーク』(千倉書房, 2010); 佐々木芳隆, 『海を渡る自衛隊-PKO立法と政治権力』, (岩波新書, 1992); 信田智人, 『冷戦後の日本外交』, (ミネルヴァ書店, 2006); 河辺一郎, 『日本と国連』, (岩波新書, 1994); 北岡伸一, 『国連の政治力学』, (中公新書, 2007); 大芝亮, “一九九〇年代における日本の国連外交”. 『一橋論叢』 제 123 권 1 호 (2007), pp. 33-44; 清水奈名子, “冷戦後の国連安全保障体制 ——人間中心的安全保障体制へ,” 『社会科学ジャーナル』 57 호 (2006), pp. 255-273; Ishizuka Katsumi, “Japan's Policy towards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2, no. 1, (2005), pp. 67-86; Oshiba Ryo, “Japan's UN Policy in the 1990s,” Pacific Focus, vol. 14 no. 1, (1999), pp. 5-26; 남창희, “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

간 갈등 증가는 국제 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 과제의 등장을 직시하게 하였다. 걸프전쟁을 필두로 다양한 지역분쟁이 심화되며, 이는 곧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계적인 탈냉전으로 인하여 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내에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⁶ 걸프전쟁 당시 130 억불의 전비지원을 하고도 종전 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표외교만 하고 국제안보체제에서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은 일본은 유엔 안보기능에의 기여를 통한 국제공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⁷ 국제사회의 압력과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등 일본 국내의 국제공헌 확대론자의 요구에 의하여 논의가 촉발되었고, 유엔 PKO 참여는 탈냉전 일본 안보외교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⁸ 일본 자위대의 PKO 파견사의 시발점은 1992 년의 캄보디아 PKO 참여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치열한 국내 논란 속에서 1992 년 PKO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1992 년에 전후 최초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1993 년에는 모잠비크에서의 임무에 참가하였고, 90 년대 말에는 동티모르에 공병대와 일부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등 꾸준히 유엔 PKO 에 참여해 왔다.⁹ 또한 1990 년대에 등장한 ‘인간안보’ 개념을 일본이 규범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PKO 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정책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도 기존연구가 밝힌 바 있다.¹⁰ 당시 안보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협력’의 규범을 일본이 받아들

학회보』 vol. 19 no. 2 (2009), pp. 461-482; 조양현, “제 3 장 일본의 다자협력과 제도화 전략,” 『JPI Research Series』, (2011), pp. 63-93; 이종국, “전후 일본의 국제기구외교-유엔(UN)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 9 (2003), pp. 184-207; 손석의·조비연, “일본의 미일동맹-유엔중심의 안보전략의 변용: 1990 년대 일본의 탈냉전기 국가정체성 재건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72 권, pp. 103-137.

⁶ 남창희, 2009, pp.461-464.

⁷ 手嶋龍一, 『外交敗戦-130 億ドルは砂に消えた』, (新潮社, 2006)의 내용을 참조.

⁸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던 오자와는 걸프전쟁의 다국적군에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안보관은 『日本改造計画』(小沢一郎, 1993)에서 ‘보통국가(普通の国)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 시기의 국내 국제공헌론에 관해서는 이하 문헌을 참조. 小沢一郎,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1993); 北岡伸一, 『「普通の国」へ』,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

⁹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실적은 「我が国の国連 PKO 活動の実績」(2016 년 6 월 15 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headline/pdf/heiwa_anzen/hakenjisseki_280615.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7 일); 本多 倫彬, 『平和構築の模索: 『自衛隊 PKO 派遣』の挑戦と帰結』, (内外出版, 2017)를 참조.

¹⁰ 대표적인 기존연구로써 이하 문헌들이 있다. 大江博, 2008; 高須幸雄, “国連と「人間の安全保障」,” 『国際問題』 603 (2011), pp. 36-48; 栗栖薫子, “現段階の「人間の安全保障」.” 『国際問題』 603 (2011), pp. 5-14.

이고 포괄적인 국제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일동맹과는 차별화된 문제였다.¹¹

하지만, 최근 아베 정권기의 일본 ‘다자안보협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자안보협력’이 1990년대와 달리 미일 안보협력에 내포된 것이 원인일 것이다.¹² 최근 유엔 PKO는 예전처럼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으며, 일본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미·일·호, 미·일·인도 삼각안보 또는 Quad 4 개국간의 협력을 다룬 FOIP 연구가 대부분이다.¹³ 게다가 미일안보를 중심으로 한 소다자안보협력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일본 FOIP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중 전략 맥락에서 분석되고 있다.¹⁴

¹¹ 오오시바(大芝)는 1990년대 미일안보체제와 유엔외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미일안보체제가 일본의 유엔외교에 있어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것을 밝혔다. 따라서 그 시기의 유엔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협력’은 반드시 미일안보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자세한 내용은 大芝亮, “一九九〇年代における日本の国連外交,” 『一橋論叢』 123, 1 (2000), pp. 33-44.를 참조.

¹²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하 문헌들을 참조. 猪口孝, G. ジョン・アイケンベリ一, 佐藤洋一郎(編), 『日米安全保障同盟：地域的多国間主義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東京：原書房, 2013); 本多倫彬, “平成時代の国際平和協力とその終焉—安倍政権の安保政策を振り返る(1)” (2020년),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https://cigs.canon/article/20201208_5520.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³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하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猪口孝, G. ジョン・アイケンベリ一, 佐藤洋一郎(編), 2013; 윤도원, 2018; 佐竹 知彦, 2015; 佐竹知彦, “日本: 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 防衛研究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2018); 마이켈·シー겔, 조세프·카미레리(編), 『多国間主義と同盟の狭間—岐路に立つ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 (国際書院, 2006); 川島真, 遠藤誠治, 遠藤乾(編), 『チャイナ・リスク』, (東京: 岩波書店, 2015); 木宮正史(編), 『朝鮮半島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2015); 김관옥, “현실주의 외교안보전략으로서의 연성편승정책—일본, 인도, 호주의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vol. 20, no. 1 (2012), pp. 153-174;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제 58 권 4호 (2015), pp.6-41;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61 권 3 호 (2018), pp. 183-201; Samuels Richard J, "Japan's goldilocks strategy," *Washington Quarterly* Vol.29 (4) (2006), pp. 111-127; Samuels Richard,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¹⁴ 대표적인 연구로 양기웅·안정화,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 전략적 관여와 헤징,” 『국제정치논총』 제 57 집 1 호 (2017), p. 237; 윤대엽,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전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아태연구』 제 26 권 제 3 호 (2019), p. 168; Mochizuki, Mike. M,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2007), pp. 739-776;

이러한 최근 연구 경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다자안보협력 정책은 2010년대 미일동맹 강화로 인해 대중 경쟁 성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1990년대 PKO 같은 포괄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그 내용과 성격을 체계적 정리한 연구가 미비하다. 둘째, 아베 정권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에만 집중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인도-태평양 시대에 들어 발생한 중국 외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3. 분석 틀과 연구방법

1) 이론적 분석틀

부상하는 강대국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전략은 일반적으로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의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균형은 “부상하는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잠재적(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및 천연 자원)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¹⁵ 균형전략은 자체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편승은 위협을 중화시키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자율성, 타 세력과의 협력 기회를 얻는 것보다 부상하는 강대국의 위협적인 힘에 비위를 맞추거나 부상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¹⁶ “안보적인 인식과

林賢參, “第二次安倍晋三内閣の対中ヘッジング戦略,” 『問題と研究』 第 43 卷 2 号 (2014), p. 30. 등이 있다.

¹⁵ Keir A. Lieber and Gerard Alexander,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30-1 (2005), p. 119. 재인용: 양기웅·안정화,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 전략적 관여와 헤징,” 『국제정치논총』 제 57 집 1 호 (2017), p. 237.

¹⁶ “Bandwagoning is defined as “alignment with the source of danger” to gain benefits and ensure security at the expense of autonomy and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other powers” Walt 1987, 17; Schweller 1994, 88-99 재인용: K

정책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의 국가전략을 균형과 편승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¹⁷ 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자위대 능력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 전략과 함께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외적 균형 전략을 병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¹⁸

그런데 균형과 편승을 토대로 한 뚜렷한 이분법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에 불과하다.¹⁹ 이 두 가지 전략 사이에는 중간 영역이 있으며, 일본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이러한 “균형과 편승 사이에서 혼재된 성격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존재한다.”²⁰ 그 중의 하나가 헤징(hedging)이다.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이란 경쟁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국가가 자국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²¹ 헤징 전략을 통해 국가는 잠재적 적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외교적·군사적 대립에 준비하며 동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²² 또한 헤징 전략의 동기는 균형 혹은 편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기에, 균형전략을 취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국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일 경우 헤징을 선호할 수 있다.²³

본 연구는 이 헤징의 구성 요소를 균형과 관여로 설정하여 일본의 외교 정책을 분석한다. 관여(engagement)란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광범위하게 증진시킴으로써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으로서, 관여의 대상국과 주체국간 상호의존을 증진시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정상화까지 추구하

ei Koga, “The concept of “hedging” revisited: the case of Japan's foreign policy strategy in East Asia's power shif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20 (4) (2018), p. 637; 양기웅·안정화, 2017, pp. 237-238.

¹⁷ 윤대엽,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아태연구』 제 26 권 제 3 호 (2019), p. 168.

¹⁸ 윤대엽, 2019, p. 168.; 林賢參, “第二次安倍晋三内閣の対中ヘッジング戦略,” 『問題と研究』 第 43 卷 2 号 (2014), p. 30.

¹⁹ 양기웅·안정화, 2017, p. 238.

²⁰ 윤대엽, 2019, p. 169. 예컨대, Mochizuki, M. M,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2007), pp. 739-776; 양기웅·안정화,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 전략적 관여와 헤징,” 『국제정치논총』 제 57 집 1 호 (2017), pp. 235-268. 등 선행연구가 해당된다.

²¹ 林賢參, 2014, p. 29.

²² Kei KOGA, 2018, p. 634.

²³ 양기웅·안정화, 2017, p. 238.

는 정책이다.”²⁴ 헤징 전략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정도 차이에 따라 ‘약한 헤징전략(soft hedging)’과 ‘강한 헤징전략(hard hedging)’로 유형화할 수가 있다.²⁵ 즉, 균형과 관여의 복합적인 정책인 헤징에는 상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국가는 전략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결정하기에 일본의 외교정책은 중국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동아시아의 타 행위자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⁶ 일본이 FOIP 를 추진하던 시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국 TPP 탈퇴, 미중 갈등 격화, 2017 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 충돌 가능성, 일대일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등 여러 요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다.²⁷ 특히, 미중 갈등 심화와 TPP 탈퇴 등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경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미국에 대한 리스크 회피의 필요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 있어서의 미국 리더십 쇠퇴를 의미했으며, 일본은 미국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2017 년부터 일본은 중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²⁸ 즉,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안보정책의 변화는 중국 뿐만 아닌 미국, 호주, ASEAN 등 다양한 행위자과의 관계 및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베 정권 시기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균형 전략이 아닌 미중 갈등 속 복합적 리스크에 대한 헤징 전략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FOIP 아래서 추진된 다자안보협력은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안보 및 소다자 안보협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전략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일동맹 강화라는 외적 균형 전략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며, 단순한 균형 전략이 아닌 헤징 전략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²⁴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 43 집 1 호 (2003), p. 234.

²⁵ Mochizuki, M. M,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2007), pp. 739-776.

²⁶ Kei KOGA, 2018, p. 644.

²⁷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국제정치』, 제 36 권 제 2 호 (2020), p. 80.

²⁸ 박영준, 2018, p. 192.

이 해징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 주목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일-ASEAN 다자안보협력에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관여의 성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ASEAN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미일동맹 강화와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해징 전략이라는 것이다. Quad 및 일본의 대동남아 정책과 관련된 다자협력 안에서 균형과 관여의 조합이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 파악해야 해징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시대에 들어 ASEAN은 미국 및 중국에 있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이러한 ASEAN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미중 속 일본의 해징 전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과 ASEAN과의 협력 관계에 주목하여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변화를 분석할 경우, 중국 외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해징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된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의 질문은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Quad와 ASEAN 두 가지 협력 추구를 통해 미중 갈등 속 발생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적 의도가 변화의 원인이다.” 즉, 일본 안보정책 내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성격 변화를 확인하여, 이를 다양한 행위자 속 리스크 해징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9년 탈냉전기부터 아베 정권이 퇴진하는 2022년까지를 연구 시기로 설정했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2010년대 아베 정권 시기에 다자안보협력 성격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자안보협력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다. 일본 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은 탈냉전기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로 인해 1990년대부터 대두하였다. 여기서 이 90년대 다자안보협력은 포괄적인 국제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미일동맹과는 차별화된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외교 문서에서는 ‘다자간 안보(多国間安全保障)’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연구시기 동안에 매년 발간된 방위계획대강 및 방위백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다자간 안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의 새로운 대외 정

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 정책에서는 미일동맹을 토대로 구성된 소다자 Quad 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일-ASEAN 협력도 중요시됐던 것을 확인한다. 일본 FOIP 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전략'에서 '구상'으로 바뀌가면서 ASEAN 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다음 단계로 본 연구는 이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의 성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Quad 와 일-ASEAN 협력 두 가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배타적 성격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일동맹 뿐만 아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포괄적 성격도 혼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인도-태평양 시대 다자안보협력이 다면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다면적 진화의 원인을 미중 갈등 속 일본의 헤징 전략으로 설명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여기서 본 연구는 일-ASEAN 협력이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여, 일-ASEAN 양자 및 다자 협력의 발전 과정, 미중 갈등 속 ASEAN 의 입장,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과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본다. 특히, 일-ASEAN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모색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다. 즉, 경제 협력 관점에서 미국 일변도로 가지 않기 위한 대미 리스크 헤징을 추진하였음을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의 성격을 가진 일-ASEAN 다자협력과 Quad 소다자 안보협력 두 가지 추구를 통해, 일본이 미중 양국에 대한 리스크 헤징을 진행하였음을 주장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 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논문의 문제제기, 기존 연구 검토, 이론적 분석틀과 분석과정을 포함하는 연구 방법을 검토하였다.

2 장은 다자안보개념을 정리한 다음, 일본에 있어 다자안보정책의 시작과 전개를 살펴보고 1990 년대 및 2000 년대 포괄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위백서, 방위계획대강 등 외교문서 내용 분석을 통해, 1990 년대는 인간안보 개념 수용과 유엔 PKO 그리고 ARF 같은 다자안보대화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미일동맹과 다른 축이

었다는 것, 그리고 2000 년대에 들어 다자안보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다자간 ‘안보대화’부터 ‘안보협력’으로 발전된 모습을 밝힌다.

3 장은 2010 년대 다자안보협력 변화의 계기가 된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적극적 평화주의 및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자안보정책이 미일동맹에 포섭된 양상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형성과정, 정책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면, 그 안에 미일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는 Quad 소다자 안보협력에 더하여 ASEAN 과의 협력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4 장과 5 장은 Quad 와 일-ASEAN 협력 두 가지 비교 분석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의 다면적 진화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4 장은 Quad 의 형성 과정과 그 배타적인 성격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는 2010 년대에 들어 3 자 혹은 4 자의 Quad 소다자 다자안보협력이 제도적으로 발전해 온 모습을 정리하여, 안보에 더하여 경제적 측면으로도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대중 경쟁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2018 년 이후 Quad 안에서 ‘ASEAN 의 중심성 (ASEAN centrality)’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면서 그 Quad 에 변화가 보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배타적 성격이 유동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다음 5 장은 제 2 차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협력의 성격과 그 전략적 중요성을 분석한다.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은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일동맹 강화와 다른 성격이 존재함을 밝힌다. 아울러 미중 갈등 격화 속 ASEAN 의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 장 결론은 본 논문의 질문에 대한 해답과 본 연구가 한국 다자안보정책에 제공할 함의를 제시한다.

II. 일본 외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변화

냉전기 일본 안보 정책은 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에 안보 및 방위를 맡기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안보정책을 진행해 왔으며,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냉전의 종료는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양자를 넘어 다자적 차원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에 있어 유엔 PKO 참여를 통한 ‘국제공헌’이 시급한 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2 장은 이러한 일본 다자안보정책의 시작점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에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내용과 미일동맹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와 새로운 다자안보개념

국제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종래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에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개념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전쟁 보다 종교 갈등, 이로 인한 난민 문제, 경제적 고통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 이외에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문제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있다.²⁹ 이러한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로 인하여 안보 개념 자체가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용돼 가고 있으며, 이는 다자안보개념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이란 3 개국 이상의 멤버에 의해 행해지는 안전보장협력”을 말하며³⁰, 고전적 의미의 다자안보 개념으로서는 동맹(alliance),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등이 존재한다.³¹ 동맹이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 수단 중 하나이며, 어떠한 국가가 이해관

²⁹ 한동만 외,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외교통상부, 2002), p. 71.

³⁰ 홍현익·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 강』, (성남: 세종정책총서, 2001), p. 79.

³¹ 다자안보협력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동만 외, 2002; 홍현익·이대우, 2001. 을 참조.

계가 일치하는 타국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결합관계를 맺음으로써 적 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거나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³² 동맹은 일반적으로 가상의 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형성되어,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 양자동맹, 다자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안보는 동맹이 외부의 위협에 일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한 체제임에 반해 잠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국제사회 전체 혹은 지역 전체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하여 공동으로 상호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³³ 오늘날의 안보개념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군사안보를 지향하는 고전적 안보개념은 여전히 국가안보의 핵심부분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냉전 시대 동맹은 전통적 의미의 안보개념으로 계속 그 유용성이 유지되고 있다.³⁴

한편,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에 따라 안보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군사적 수단을 강조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이 대두하였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다. 포괄적 안보는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보유하고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치·군사 위주의 안보개념을 비정치적·비군사적 개념까지 포함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함을 의미한다.”³⁵ 포괄적 안보개념은 특히 일본과 아세안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60년대 말부터 포괄적 안보시각에 입각한 안전보장론을 거론하였으며, 일본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총합안전보장”이라는 명칭을 포괄안보를 주장하였다.³⁶ 탈냉전기 이후 등장한 이 새로운 안보개념이 점차 수용됨에 따라 다자안보의 실현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공동안보(common security)는 위협을 내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안보와 공통점을 지니지만, 개념의 출발점 및 발상의 계기가 다르다. 공동안보는 냉전 체제하 유럽에서 핵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며, 전쟁을 피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통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이는 냉전기 핵전쟁의 공포와 점증하는 포괄적

³² 한동만 외, 2002, p. 76.

³³ 神保謙,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多国間安全保障協力 —協調的安全保障・信頼 醸成措置の限界性と ARF プロセス—,” P. 8. http://www.jiia.or.jp/pdf/asia_centre/jimbo_shuushi.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³⁴ 한동만 외, 2002, p. 74.

³⁵ 한동만 외, 2002, p. 82.

³⁶ 한동만 외, 2002, pp. 82-84.

안보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시도되었다. 즉, 냉전 시기 핵전쟁의 위협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더하여,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기아문제, 경제갈등,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 해결을 추구하려는 목표로부터 출현한 안보개념인 것이다. 또한 탈냉전기 발전한 다자안보 개념으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가 있다. 협력안보란 “각 국가의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³⁷으로 이해되며, 군사안보와 포괄안보 두 가지가 포함되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은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나 문화적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간을 설정하는 개념이다.”³⁸ 탈냉전 이후 부각된 내전, 기아, 빈곤, 인종 청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1994년 유엔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 의해 최초로 주장되었다.³⁹ 종래의 전통적인 각도에서 군사적 위협에 더하여 비전통적 분야까지 안보위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안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인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위협을 개인에 대한 안보위협과 동일시하는 기존의 안보개념과 구별된다.⁴⁰ 이처럼 안보개념의 확대로 인하여 다자안보의 형태, 대상, 목적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맹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안보개념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자안보의 성격 및 지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다자안보협력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다수로 인한 집단행동 (collective action)의 문제점으로 ‘무임승차(free-riding)’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 행위자를 강조하는 ‘소다자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제도적 무기력성을 극복하고 양자주의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파트너십 형태로 구성되는 소다자 협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소 3국 이상의 국가 간 협력을 소다자주의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구성 국가들의 협의가 특정 이슈에 대

³⁷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 15 권 제 1 호, (2010), p. 15.

³⁸ 이해정·박지범,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Vol.22, No.1 (2013), p. 1.

³⁹ 이해정·박지범, 2013, p. 3.

⁴⁰ 한동만 외, 2002, p. 89.

한 구체적 합의 혹은 협력을 동반해야 한다.”⁴¹ 또한 “소다자 안보협력은 유연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인 관계로 연루(entrapment)나 방기(abandonment)의 위협이 경감된다.”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3 가지 점에서 소다자주의의 장점을 정리할 수 있다.⁴² 첫째, 비형식성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특정 ‘비용분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다자주의보다 자유롭다. 셋째, 가치, 이익을 공유하는 소수 국가의 모임이므로 협의를 신속히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에 의거한 ‘소다자 안보협력’은 기존의 양자 ‘국방협력 협정(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DCA)’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크며, 이로 인해 동맹보다 유연한 의무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안보 고려 요소의 확대에 따라 다자안보개념도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행위자 접근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소다자 안보협력도 점차 대두하고 있다.

2. 다자안보정책 시작과 전개

1) 인간안보 규범 수용

일본에서 포괄안보는 “총합안전보장(総合安全保障)”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일본에서의 총합안전보장의 발전은 미일동맹관계의 일방적인 의존을 줄이고 전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합리화하는 정책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⁴⁴ 1980년 발간된 ‘총합안전보장보고서’는 일본의 안보정책 목표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유지, 국가 방위력 증강, 중-소와의 관계 개선, 에너지 및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 대규모 지진 대책 총 6 가지를 제시하였다.⁴⁵ 그리고 이 실현을 위하

⁴¹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 23 권 1 호 (2019), p. 129-130.

⁴² Moret Erica, “Effective Minilateralism for the EU: What, When and How,”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Brief* (June 3, 2016), p. 2. 재인용: 박재적, 2019, pp. 130-131.

⁴³ 박재적, 2019, p. 132.

⁴⁴ 한동만 외, 2002, p.83.

⁴⁵ 한동만 외, 2002 p.83; 内閣官房内閣審議室分室, 内閣総理大臣補佐官室(編), “総合安全保障戦略:総合安全保障研究グループ (大平総理の政策研究会報告書)”, (東京: 大蔵省印刷室, 1980).

여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상호의존성을 창출하는 무역투자정책과 공공차관 공여정책을 바탕으로 한 비군사적 안보접근을 진행해 왔다. 즉, 1980년대 일본에서는 총합안보가 새로운 안보 규범으로 수용되어 다자와의 협력을 통한 안보 추구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안보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기에 동맹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군사안보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다자안보정책이 제도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

1991년 걸프전쟁 발발 시 일본이 경제적 지원만 진행하고 인적 공헌을 못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자위대의 PKO 참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일본에서 국제평화협력법(이하 PKO 법)이 설립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되는 가운데 헌법 9조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일본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자협력을 실현하는가를 검토한 적극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국제평화협력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가능하게 법정비를 진행한 이 시기가 바로 일본에서의 다자안보의 제도적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의 종언과 안보환경의 변화 및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점차 중시되었으며 ‘인간안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안보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995년 11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 각의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는 방위계획대강이 개정되었다. 이 방위계획대강은 냉전 종언 이후 처음으로 “보다 더 안정적인 (세계) 안보환경 구축에의 공헌”을 방위력의 역할로 규정하였다.⁴⁶ 즉,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은 국제공헌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이 맥락에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일본 안보정책은 이러한 국제적 역할과 국제공헌의 방법으로써 주로 인간안보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대두한 인간안보는 정부개발원조(ODA)를 비롯한 일본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규범으로 수용되었다. 게다가 이는 안보정책에서도 중요한 규범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제협력 그리고 유엔외교로 이어졌다. 인간안보 실현에 있어 일본 정부가 특히 중시한 것은 유

⁴⁶ 「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1995년 12월),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1996_taikou/dp96j.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엔과의 연대였다.⁴⁷ 일본에 있어 인간안보의 수용은 다자협력에서의 리더십 발휘라는 안보정책적 측면이 존재하였으며⁴⁸, 1990년대 그 다자안보협력의 핵심이 바로 유엔 PKO 이었다. 이로써 인간안보는 유엔외교라는 일본 안보정책과 연결되며 다자안보정책 안에서 규범화되었다.⁴⁹ 즉, 당시 안보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협력의 규범을 일본이 받아들임으로써 포괄적인 국제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일동맹과는 차별화된 문제였다.

2) ‘다자간 안보’의 지속적 사용

이러한 다자안보정책의 시작점을 염두에 두고, 방위계획대강, 방위백서 그리고 간담회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안보정책 내에서 ‘다자간 안보 (多国間安全保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인간안보의 수용이 일본의 다자안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방향으로 다자 안보가 언급된 것은 1994년에 최초로 개최된 ASEAN 지역포럼(ARF)에서였다.

1992년 6월에 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PKO 협력법안이 성립되어, 동년 9월 캄보디아로 자위대가 파견되었다. 1992년 이후 방위백서에는 ‘국제공헌과 자위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그것이 다자안보정책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PKO 협력법을 둘러싼 국내 투쟁과 정치과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PKO 파견은 전 카이후(海部) 내각 시기부터 계속 심의되던 주제였지만, 임무 시에 발생하는 무력행사 우려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부, 외무성, 방위성, 국회에서 대립이 존재하였다.⁵⁰ 이러한 대립과 복잡한 법 정비 과정에 결과, 유엔을 매개로 하는 자위대의 국제안보협력은 ‘국제평화협력업무’로 표현되었고, 다자와의 안보협력이라는 것은 강조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미야자와는 1992년 5월부터 국제정치 및 외교의 전문가들을 모여 “21세기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을 생각하는 간담회”를 설립하여 냉전 종료 이후 일본이 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⁴⁷ 高須幸雄, 2011, p. 39.

⁴⁸ 栗栖薫子, 2011, p. 7.

⁴⁹ 大芝亮, “多国間外交と多国間主義,” 『日本の外交 第5巻 対外政策課題編』, (東京:岩波書店, 2013), p. 302.

⁵⁰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정모델을 인용해 일본 안보정책의 정책결정과정분석을 진행한 信田智人, 『冷戦後の日本外交』, (ミネルヴァ書店, 2006) 를 참고.

하는지 검토하였다. 간담회는 12 월에 “21 세기의 아시아·태평양과 일본: 개방성의 추진과 다양성의 존중(二一世紀のアジア・太平洋と日本: 開放性と多様性の尊重)”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SEAN 이나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가 경제발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냉전 구조 붕괴 이후 안전보장 환경의 유동성에 대해 언급되었다.⁵¹ 아울러 향후 일본 안보 정책에 대해 PKO 의 관여, 지역정책대화의 추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본 미일동맹관계의 재정비, 자유무역체제의 추진 등 논점이 제시되었다. 정권 교체로부터 시작되는 국내정치의 변동으로 인해 결국 이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외교정책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부터 일본은 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정책으로 다자안보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ASEAN 지역포럼(ARF)은 1994 년 7 월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 안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 포럼이고 안보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유일한 정부 간 포럼이다.⁵² 정치,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보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교 및 방위·국방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포럼으로 현재 일본 및 ASEAN 국가를 포함하는 26 개국과 EU 로 구성되어 있다. ARF 가 개최된 같은 해 8 월에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추구할 외교 방향으로 처음으로 ‘다자간 안전보장대화(多国間安全保障対話)’가 언급되었다. 백서는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 금년 ASEAN 지역 포럼에서의 다자간 정치·안전보장대화의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 ... 향후 이 지역 내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안전보장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각 국의 정치적 신뢰성이 증가되어 게다가 지역 군사정세에도 보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⁵³

이를 계기로 이후 방위백서에 ‘다자간 안전보장대화’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방위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6 년, 1997 년, 1998

⁵¹ 宮城大蔵(編), 『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 (ミネルヴァ書房, 2015), p. 224.

⁵² 「ASEAN 地域フォーラム (ARF) の概要」 (2007 년 9 월),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arf/gaiyo.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⁵³ 「平成6年版 防衛白書」 第1章 第3節 (1994),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4/w1994_01.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년 모두 유사한 제목 안에서 ‘국제평화협력업무’와 ‘다자간 안전보장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⁵⁴ 즉, 1990년대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은 유엔 PKO 참여와 다자안보대화 두 가지를 추진하고자 했다. 1994년 2월 호소카와(細川 護熙) 정권 시기에 발족된 방위문제간담회(防衛問題懇談会)가 동년 8월 무라야마 내각에 제출한 보고서(「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在り方 -21世紀向けての展望」)에는 일본의 새로운 다자안보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⁵⁵ 간담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 안전보장협력’을 주장하였고, 유엔 PKO의 강화와 자위대의 적극적 참여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했을 시 당연한 의무이며 그것이 결국 일본의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이야기하였다.⁵⁶ 구체적 정책으로는 PKO나 ARF를 활용한 다각적 안보협력 추진, 미일안보 협력 관계의 확충, 효율적인 방위력의 유지 및 운영이 제시되었다.⁵⁷ 이 내용은 1995년 방위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다자간 안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2년에 PKO 법안 성립된 후 유엔을 매개로 하는 일본 자위대의 국제안보협력이 시작되었고, 이는 ‘국제평화협력업무’로 표현되었다. 둘째,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방향으로 ‘다자간 안보’가 언급된 것은 1994년에 최초로 개최된 ARF이 시작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전보장대화’ 추진이 그 목표였다. 셋째, 유엔 PKO 및 다자간 안보대화의 추진은 ‘보다 좋은 안보장환경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즉, 유엔 PKO가 일본의 다자안보의 시작점이지만, ARF 개최를 계기로 다자간 안보대화의 자리가 확보됨으로써 PKO와 ARF 두 가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다자안보협력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이 PKO 및 ARF는 국제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미일동

⁵⁴ 「平成8年版 防衛白書」第4章 第3節(1996),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6/403.htm,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20일); 「平成9年版 防衛白書」第2章(1997),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7/def21.htm,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20일); 「平成10年版 防衛白書」第4章(1998),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8/wp1998_41.pdf,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20일).

⁵⁵ 보고서의 내용은 이하 문헌을 참고하였다. 宮城大蔵(編), 2015; 望月和彦, “ポスト冷戦期の国連PKOと日本の安全保障,” 『総合研究所紀要』, 第21巻 3号(1996), pp. 49-61.

⁵⁶ 望月和彦, 1996, p. 49.

⁵⁷ 宮城大蔵(編), 2015, p. 230.

맹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1990년대 다자안보는 국제사회와 일본 간의 포괄적 협력을 기반에 두고 전개되었고, 특정한 국가, 지역을 배제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1999년 이후 방위백서에는 “심화되는 다자간 안전보장대화”와 “안전보장대화·방위교류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다자안보가 한층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이나 불량국가들이 대량 파괴무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망을 파괴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이에 따라 협력안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2001년 12월 22일 고이즈미 내각에서 PKO 법이 개정되어, 이로 인해 평화유지대(PKF) 업무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2000년대 초는 협력안보의 수단으로써 PKO의 중요성이 증가한 시기였다.

용어의 지속적 사용에 관해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난 2010년 기점으로 외교문서에서 ‘다자간 안전보장협력(多国間の安全保障協力)’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2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서 결정된 신방위대강은 3가지 안보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직접적 위협 방지, 둘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의 안정화와 글로벌 안보환경의 개선으로 통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셋째는 세계 평화와 안정 및 인간안보의 확보에 대한 공헌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활동의 지지, 동맹국과의 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협력 등 다층적 안보 협력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2011년에는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다자간 안전보장협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⁵⁸ 백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다층적 안전보장협력(国際社会における多層的な安全保障協力)”을 일본의 안보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삼아, “미일동맹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더욱 안정화 시킬 것” 그리고 “글로벌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 평화협력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명시하였다.⁵⁹ 즉, 2000년대는 ‘다자간 안보’가 ‘대화’에서 보다 실천적인 ‘협력’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고,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 와 자위대 파견

⁵⁸ 「平成 23 年版防衛白書」(2011),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1/2011/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19일).

⁵⁹ 「平成 23 年版防衛白書」(2011),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1/2011/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19일).

을 통한 국제공헌이 그 중심이었다. 또한 앞에 백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미일동맹”과 “국제평화협력활동”은 다자간 안보협력 안에 두 가지 별개 중심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다자간 관계를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해 호주, 한국, 인도 등 국가들과의 3 국간 관계 강화도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 년 신방위대강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며 일본과 기본적 가치 및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 및 호주와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유지·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고,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와의 협력도 언급하였다.

3. 소결

일본에 있어 1990 년대부터 대두한 ‘인간안보’ 규범의 수용은 다자협력에서의 리더십 발휘라는 안보정책적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1990 년대 그 다자안보협력의 핵심이 바로 유엔 PKO 이었다. 일본의 다자안보협력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국제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94 년에 최초로 개최된 ARF 을 계기로 ‘다자간 안전보장대화’가 일본 외교 문서에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자간 안보대와의 추진은 ‘보다 좋은 안보장환경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PKO 와 ARF 두 가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다자안보협력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90 년대 다자안보는 국제사회와 일본 간의 포괄적 협력을 기반에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는 미일동맹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이러한 성격은 2000 년대까지 지속되었다. PKO 법이 개정되면서 2000 년대 초는 협력안보의 수단으로써 PKO 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 년대부터는 ‘다자간 안보’가 ‘대화’에서 보다 실천적인 ‘협력’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와 자위대 파견을 통한 국제공헌이 핵심 과제였다. 그리고 여전히 미일동맹과 국제평화협력활동은 다자안보협력 안에 두 가지 별개 기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Ⅲ. 다자안보협력 정책 변화의 계기 :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2012년 12월 26일부터 제2차 아베 정권이 시작되었다. 아베 내각은 2013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하 13대강)을 발표하였는데, 대강에 따르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 그리고 ‘양자간 및 다자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글로벌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평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선언하였다.⁶⁰ 또한 한·미·일(日米韓), 미·일·호(日米豪) 3국간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대화’에 있어 미국이나 호주와 연대하고 역내 협력 관계 구축에 주체적 역할을 공언하겠다고 언급하였다.⁶¹

2013년 이후 방위백서에서도 ‘적극적인 안보협력’의 맥락에서 ‘다자간 안보’가 계속 사용되어 있다. 13대강 발표 후 처음으로 발간된 방위백서(2014년판)에서는 「안보협력의 적극적 추진」 안에 “능력구축지원을 비롯한 실천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추진(能力構築支援をはじめとする実践的な多国間安全保障協力の推進)”이 추가되었다.⁶²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란 지속적으로 안보·방위 분야에 관한 인재교육이나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대상국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창출하여 글로벌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⁶³ 또한, 인도지원, 재난지원, 해양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비전통적 안보를 포함한 안보·방위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방위성, 자위대가 타군, 군관계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항목이 ‘다자간 안보협력’에 추가됨으로써 종래 ‘다자간 안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유엔 PKO 활동이 ‘다자간

⁶⁰ 「平成 26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 年 12 月), p. 7,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 (최종검색일: 2022 年 9 월 20 日) .

⁶¹ 「平成 26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 年 12 月), p. 10.

⁶² 「平成 26 年版防衛白書」 제 3 부 제 3 (2014 年),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4/html/n3313000.html, (최종 검색일: 2022 年 9 월 19 日).

⁶³ 「平成 29 年版防衛白書」(2017 年),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7/html/n3213000.html, (최종검색일: 2022 年 9 월 19 日).

안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1990년대부터 일본의 안보정책으로 부상한 다자안보는 제 2기 아베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성격은 과거와 달라졌다.

1. 미일동맹이 중심이 된 일본의 다자안보협력

1)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 안보정책은 2010년에 들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 2차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에 근거한 안보정책을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2013년 12월 총리를 필두로 외교 및 안보의 여러 과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처음으로 방위계획대장을 상회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제정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이념, 국익, 목표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에 관한 과제를 밝힘으로써 일본이 취해야 할 안보 전략을 제시한 문서다. 여기서 ‘일본의 능력 및 역할의 강화와 확대,’ ‘미일동맹의 강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보협력의 강화,’ 등 총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명기되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방위계획대장도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을 평화국가로 규정하고, “국제협조주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경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행위자로서 평화유지에 적극적 역할을 맡을 것을 선언하였다.⁶⁴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알맞고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防衛裝備移転三原則)이 각의 결정되어, 이로 인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 이래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새로운 무기 수출입 기준이 형성되었다. 이에 관해 정부는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이전이 미일동맹 강화라는 측면에 더하여 국제평화협력, 국제긴급원조, 인도적 지원, 국제테러 문제의 대처, 개발국의 능력 구축 등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효과적인 실시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추진할

⁶⁴ 박영준,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신아시아』, 22권 2호 (2015), p. 65.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⁵ 2013년에는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에서 참여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한국군에 탄약 약 1만발을 제공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당시 채용하던 무기수출 3원칙을 따르지 않고 지원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2015년 9월에 설립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도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움직임이었다.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란 자위대법 등 10개의 기존 법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平和安全法制整備法)’과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國際平和支援法)’의 총칭이다. 기존법의 개정 및 신법의 성립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정비의 목적이었다.

2010년대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중심적 내용은 ‘미일안보협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내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목표는 첫째 억지력의 강화와 일본에 대한 위협의 방지, 둘째 미일동맹 강화와 지역안보의 개선, 셋째 글로벌 안보보완환경의 개선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의 구축이다. 즉, 미일동맹의 강화는 국가안보 목표이자 일본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이미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이래 일본은 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지만,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 시대에 들어서 미일 안보협력은 일본 안보정책에서의 핵심적 위상을 보다 공고화했다.

2) 미일 신가이드라인

특히 2015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는데, 이로써 미일동맹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되었다. 2015년 4월 27일 미일 2+2 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CC)는 방위협력 소위원회(SDC)의 신가이드라인을 승인하여, 이로써 1997년 미일 가이드라인을 대신하는 신가이드라인이 탄생했다. 신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정책 방향을 확인하며, 현대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억지력(抑止力) 및 대처력(対処力)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구상을 확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⁶⁵ 「防衛裝備移転三原則」(2014년 4월 1일),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gaiyou/jimu/pdf/boue11.pdf>, (최종검색 일: 2022년 11월 28일).

민주당 정권기인 2012년 8월에 협의가 시작되어,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2013년 10월 후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개시되었다.⁶⁶ 신가이드라인 작성의 배경은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유사 시 미일협력이 주된 문제였지만, 재개정은 해양지역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의 현상 변경에 대한 대응이 중심적 검토 과제였다.⁶⁷

신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간 안보’에 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V 지역 및 글로벌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地域の及びグローバルな平和と安全のための協力)」에서는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⁶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제적인 활동에서의 협력”과 “3자 및 다자간 협력”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제적 인도지원, 해양안보, 파트너의 능력구축지원, 후방지원 등 분야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가능한 협력을 하는 것을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유엔 PKO는 미일안보 확대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미일방위협력 안에서 3개국 및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양국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3개국 및 다자간의 안전보장과 방위협력을 추진하여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국제법 및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는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종래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는 NATO 같은 다자간 동맹과 달리 미국과의 양자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중심축과 바퀴살(hub and spoke)’ 구조가 기반이었는데, 당시 미국 오바마 정권은 이를 발전시켜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역점을 두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동맹국과의 능력구축지원이나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지역 존재감, 영향력을 높

⁶⁶ 2013년 10월 「2+2」에서의 합의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2015년 4월에 “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浅井一男·等雄一郎, “新たな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その経緯と概要、論点—,” 『調査と情報』 874号 (2015), p.3.)

⁶⁷ 浅井一男·等雄一郎, 2015, p.1.

⁶⁸ 浅井一男·等雄一郎, 2015, p. 7-8; 「平成 27 年版防衛白書」(2015 年),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5/html/n2322000.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미일 신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⁹

이는 ‘동맹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맹의 글로벌화란 “동맹이 그 임무를 공통의 적 가맹국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방위’에서 동맹 영역 외에서의 지역분쟁에 대한 대처나 평화유지활동 혹은 테러 대책 등 지구규모의 ‘질서형성’, ‘질서유지’ 활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⁷⁰ 미일동맹은 특히 9.11 테러 이후 동맹의 글로벌화의 움직임이 급속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한편으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정책 의도’ 관점에서 간격이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도 존재한다.⁷¹ 글로벌한 협력에 공헌함으로써 미일동맹의 유지·강화 및 군사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과 질서 유지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라는 의도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대두하는 속에서 더욱 부각이 되었다.⁷² 즉,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동맹 강화 그 자체를 목적이 아닌 질서 형성·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을 고려했을 시 2010년대 아베 정권에서 일어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 현상은 일본이 글로벌 질서 형성 및 유지를 주체적으로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그 변화

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소다자 안보협력

제 2기 아베 정권기에 들어서 새로운 안보 틀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간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등장하였다. 아베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구상에 따라 미국, 호주, 인도 등 동질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전략을 추구했다. 아베 총리는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라는 기고

⁶⁹ 神保謙, “アジア太平洋の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と日米同盟,” 『日米関係の今後の展開と日本の外交』(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1년 3월), pp. 177-181.

⁷⁰ 添谷芳秀, 『秩序変動と日本外交：拡大と収縮の七〇年』(ProQuest Ebook Central),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p231.

⁷¹ 添谷芳秀, 2016, 제 9 장 「2 冷戦後の日米同盟のグローバル化」 참조.

⁷² 添谷芳秀, 2016, pp. 246-249.

문을 게재했으며, 이 기고문을 통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양 공간에 위치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 개국이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³ 이 4 개국 협력 구상은 동중국해 진출을 강화하고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수호하고 공공재로 지키는 안보연대였다.⁷⁴ 특히 일본은 대호주, 대인도 안보협력을 보다 강조했으며, 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일·호, 미·일·인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 도쿄 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에서 일본의 대외정책기조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다.⁷⁵ 이로써 앞서 전개했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 일본 외교 정책으로 발전되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두 해양,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두 대륙이 교차하는 해양 공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힘이나 위력이 아닌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공간’이라고 특징지었다.”⁷⁶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사회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며, 세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 첫째는 법의 지배 및 항행의 자유, 둘째는 경제적 번영 추구, 셋째는 평화와 안정의 확보이다. 이 실현을 위해 Quad 4 개국 및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지역전략으로 등장한다.⁷⁷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일본이 추구할 글로벌 질서로 제시되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 인도 및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Quad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 개국의 양자 및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면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 개국의 전략대화체

⁷³ 조은일, 2020, p. 80.

⁷⁴ 조은일, 2020, p. 80.

⁷⁵ 「平成 29 年版外交青書」(2017년 4월),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7/html/chapter1_02.html#T003,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⁷⁶ 조은일, 2020, p. 82.

⁷⁷ 조은일, 2020, p. 82.

인 Quad 가 그 중심핵을 구성하고 있다. Quad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은 과거와는 대별될 정도로 그 빈도와 내용 모두에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양국 혹은 삼국 간의 군사회담과 연합훈련의 증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⁷⁸ 또한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6 년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이 구상은 제 1 차 아베 정권에서 내세운 ‘가치관외교(価値觀外交)’에서의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⁷⁹

이러한 일본의 소다자 안보의 심화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고 하는 안보전략이다. 구조적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축과 호주·인도와의 협력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⁸⁰ 실제로 일본과 인도, 호주와의 협력은 미국을 포함한 미·일·호, 미·일·인도 틀에서의 삼자 협력이 기반이 되어 있다. 즉,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간 안보’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는 그 소다자 안보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2010 년대 아베 정권 시기 다자안보협력은 1990 년대와는 달리 미일동맹에 포섭되어 보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모양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 년대 다자안보는 유엔 PKO 가 그 핵심이었으며, 미일동맹과는 다른 차원, 다른 범주의 문제로 차별화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 년대에는 Quad 와 같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미일동맹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 년대 아베 정권에서 언급되는 다자안보는 1990 년대와 유사성 갖는 것이 아닌 미일안보동맹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8 년 12 월 18 일 제 2 차 정권기에 들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방위 계획대강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 반영되었다. 안보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이라는 비전이 기술되어, 다각적, 다층적인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책 방침으로 제시되었다. 본 방위대강에서 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여 보편적인 가치나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연대를 맺는 것이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Quad 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목표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와 지역을 유기적으로

⁷⁸ 윤도원, 2018, p. 38.

⁷⁹ 佐竹知彦, 2015, p. 24.

⁸⁰ 윤도원, 2018, p. 39.

연결하는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⁸¹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 지역적 질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과는 전략적 경쟁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미국과 동일한 전략 인식을 인용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 “기존의 국제질서과는 상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힘으로 인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군사동향은 국방정책, 군사력의 불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중대한 우려가 되어 있다”고 과거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추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Quad 국가들의 안보 협력이 중심이었는데, 이는 미일안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방위적 우려에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미일동맹과 연결시킴으로써 4 개국 협력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즉, Quad 간의 소다자 안보협력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따른 아베 정권 시기 다자안보정책은 미일안보의 강화라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3 가지 축

아베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서 새로운 안보 틀로 Quad 다자안보협력이 강화하였는데, 이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미일동맹과 불가분한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온 ASEAN과의 다자안보협력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일환으로 포함됨으로써 일본의 동남아 다자안보정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8 년 이후부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에서 일본과 ASEAN 과의 협력이 Quad 보다 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즉,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대외정책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어떠한 외교정책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관한 일본 정부의 문서 및 아베의 발언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이 정책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6 년 8 월에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일본의 FOIP 구상이 일본 외교전략으로

⁸¹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제 22 권 3 호 (2019), p. 248.

부상하였다. 이 연설의 내용은 2017년 4월에 발간된 외교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현저하게 성장중인 아시아와 잠재력이 넘치는 아프리카 이 ‘두 가지 대륙’,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과 인도양 ‘두 가지 해양’의 교차로 인해 생기는 다이내미즘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⁸² 이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관한 언급이 외교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2017년 11월 아베 수상은 아시아 순방 중이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양국은 FOIP의 실현을 위해 1) 법의 지배 및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인 가치, 2) 경제적 번영 추구, 3) 해양국제법 집행의 능력구축지원 등 평화와 안정의 확보 총 3가지 관점에서 미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을 합의하였다.⁸³ 이는 초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탱하는 ‘3개의 축’이었다.

2018년 1월 아베 수상은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향후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도-태평양에 관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ASEAN, 호주, 인도 등 국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합니다.

태평양부터 인도양까지 펼쳐지는 광대한 바다. 고래 이 지역 사람들은 넓고 자유로운 바다를 무대로 번영을 추구해 왔습니다.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는 그 기초입니다. 이 바다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공공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합니다.⁸⁴

그리고 2018년 2월 외무성의 2017년도 ODA 백서가 발간되어, 그 안에서 FOIP에 관한 언급이 게재되었다. 백서에는 2016년 8월 TICAD에서의 연설과 ‘3개의 축’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법의 지배에 의거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를

⁸² “2016年の国際情勢と日本外交の展開,” 「平成29年版外交青書」(2017년 4월), 第1章 p. 5.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7/pdf/pdfs/1.pdf#page=5>,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8일) .

⁸³ 「日米首脳ワーキングランチ及び日米首脳会談」(2017년 11월 6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3422.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⁸⁴ 「第百九十六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2018년 1월 22일),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0122siseihousin.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유지, 강화하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차별없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국제공공재」로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국가에게 차별없이”와 “국제공공재”라는 표현은 앞에 아베의 시정방침연설과 겹치는 부분이다. 즉, 당시 일본의 FOIP 구상에 있어 이것이 중심적인 구성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⁸⁵

2018년 5월에 발표된 2018년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FOIP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질서는 해적, 테러, 대량과괴무기의 확산, 자연재해, 위법행위 등 여러 위협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함과 함께 국제 수준에 따른 ‘질 높은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안정과 번영을 차별없이 가져다주는 ‘국제공공재’로 만들게끔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②국제 수준에 따른 ‘질 높은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연결성의 강화하여 경제적 번영 추구, ③해양국제법 집행의 능력향상지원, 해적대책, 방재, 비확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찬동해 준다면 일본은 어떤 국가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⁸⁶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2017년 외교청서 및 2017년도 ODA 백서에서 제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3가지 축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큰 틀에서 변화하지는 않았다. 2018년 외교청서는 ODA 백서의 기술 내용을 반영하면서 FOIP의 안보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므로써 우려하고 있는 위협 형상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ODA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연결시킨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⁸⁷

⁸⁵ 相澤輝昭, 「その後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変遷と展開」 p. 3, (2019年6月15日),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 <https://www.spf.org/oceans/global-data/user33/20190627163005471.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⁸⁶ “特集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 「平成30年版外交青書」(2018년 5월), p. 13-14,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8/pdf/pdfs/1.pdf#page=4>,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⁸⁷ 相澤輝昭, 2019, p4.

2018 년 외교청서의 내용은 2019 년 외교청서에도 등장하여, 일본 정부의 FOIP 에 관한 해석으로 널리 알려져 정착되었다. 하지만, 2018 년 이후 일본 정부의 FOIP 는 2 가지 점이 변화되었다. 하나는 FOIP 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3 개의 축’이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2018 년 9 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서”⁸⁸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ODA 백서나 외교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현상 등을 추가하여, FOIP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해설한 문서이다. 여기서는 FOIP 의 ‘3 개의 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있다.

- ①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 ② 경제적 번영 추구
- ③ 평화와 안정의 확보

그리고 제시된 새로운 3 개의 축 아래서 1) 국제질서의 기본원칙 유지, 2) 3 가지 연결성(물리적, 인적, 제도적)의 개선, 3) ‘능력구축’과 ‘인도적 지원·재해 구조 분야 등’이라는 3 가지 수단이 표기되었다. 종래 3 개의 축에 관해 ‘해양국제법 집행의 능력향상지원’은 ‘법의 지배 강화’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이번 문서는 목표와 수단 관점에서 재정리했다.⁸⁹

3) ‘전략’에서 ‘구상’으로 : ASEAN 과의 관계를 설정

다른 하나는 “전략 (Strategy)”에서 “구상(Vision)”으로 정책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18 년 11 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구상 혹은 비전으로 대체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아베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의 연계를 구축하면서도, 중국과의 대립 정도를 약하게 하고 능력구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했다.”⁹⁰ 이 변경에 대해 당시 언론이나 선행연구들은 비동맹정책의 전통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

⁸⁸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2018 년 9 월, 2019 년 1 월 개정),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07642.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⁸⁹ 相澤輝昭, 2019, p. 4.

⁹⁰ 조은일, 2020, p. 87.

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ASEAN 국가들의 고민과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⁹¹ 최근 2021년 6월에 공개된 외무성 주축 인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변경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밝혀졌다.⁹² FOIP 입안에 참여한 외무성 현 총합외교정책국장 이치카와(市川恵一)⁹³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전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군사적 인상을 심어주어, ASEAN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운 국가들은 경계한다. 이런 국가들에 “일본이나 중국이나”라는 판단을 강요하면 안된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면, 중국에 대해 염려하는 국가들도 FOIP에 동조하기가 더 쉬워진다.

따라서, 보도자료와 선행연구들의 분석대로 중국을 포섭한다는 전제를 강조함으로써 ASEAN을 비롯한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국가들에게 안심감을 주려는 의도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치카와는 명칭의 변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해설하고 있다.

ASEAN 등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모두가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FOIP 비전을 향해 노력한다. 일본의 『전략』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념에 동의한 ASEAN은 2019년 개방성, 투명성, 국제법을 존중하는 ASEAN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관점(ASEAN Outlook on Indo-Pacific, AOIP)”을 내세웠다. 또한 영국, 프랑

⁹¹ 조은일, 2020, p. 86-87; Kei Koga,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okyo’s tactical hedging and the implications for ASE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019), pp. 295-305. 또한 이 수정에 대해 당시 일본경제신문은 “「전략」이라는 단어로 중국이 경계하게 만드는 것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이 찬동하기 쉬워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日本經濟新聞(Web)』, 2018년 11월 13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7648990S8A111C1PP8000/>.

⁹²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誕生秘話」 (2021년 6월 30일) NHK 정치マガジン,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62725.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⁹³ 인터뷰 당시는 외무성 북미국장.

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까지 FOIP 비전을 공유하며 관계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무성은 2018년 12월에 발표한 문서에서 ASEAN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심으로 그리며 ‘ASEAN 중심성과 통일성(ASEAN’s centrality and unity)’을 중시한 한편, 호주·인도·미국과 Quad 간의 ‘전략적 연대’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⁹⁴ 또한 일본 외무성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서’라는 2019년 1월에 수정한 문서를 통해, “첫째, 개방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고, 둘째,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협력체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다고 밝혔다.”⁹⁵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ASEAN과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Quad 협력을 연계시키거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대중국 견제라는 색채를 가능한 희석시키면서, 포괄적인 성격의 ‘인도-태평양’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⁹⁶ 따라서 아베 내각은 2018년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ASEAN의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포괄적인 질서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정책의 역점 변화시켰다. 2020년 5월에 발간된 2020년도 외교청서에는 새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파트너 국가들(インド太平洋地域の主要なパートナー諸国)”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20년 청서에서도 ASEAN이 가지는 지역협력의 중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일본의 FOIP와 ASEAN의 AOIP를 추구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할 것이 명기되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일동맹 강화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 그리고 인도와의 소다자 안보협력을 추진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경제,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은 미일동맹 강화함으

⁹⁴ Kei Koga, 2019, p. 298.

⁹⁵ 조은일, 2020, p. 86-87

⁹⁶ 조은일, 2020, p. 88

로써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는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y)임과 동시에 동남아 지역의 중심성 및 연결성을 강조하여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협력 전략(cooperative strategy)의 측면도 가진 다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⁹⁷ ASEAN 과의 협력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방위대강에서 양자·다자 협력을 통해 ‘ASEAN의 중심성’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밝혔으며, 2018년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도 아베는 인도-태평양에 관해 ASEAN 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은 2018년 이후 FOIP을 실현하기 위해 ASEAN의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포괄적인 질서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정책의 중심점을 변화시켰다.

즉, 일본과 ASEAN 과의 다자안보협력에는 미일동맹과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일-ASEAN 안보 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지 그 전략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두 장에서는 Quad 와 ASEAN 의 형성 과정 및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은 왜 Quad 와 일-ASEAN 협력이라는 두 가지 다자안보 협력을 추구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⁹⁷ 神谷万丈, 「競争戦略」のための「協力戦略」-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構想)の複合的構造」(2019年2月), SSDP(Society of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Studies), <http://ssdpaki.la.coocan.jp/proposals/26.html#fn18>,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IV. Quad: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 협력의 중심

아베 총리는 호주,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미국을 포함한 3자 혹은 4자의 Quad 소다자 다자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Quad는 안보에 더하여 경제적 측면으로도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대중 경쟁 전략의 성격이 강해지며,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 다자안보협력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여기서는 양자, 3자, 4자 간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대중국 경쟁 연대라는 성격을 확인한다. 또한 4장 마지막에는 2018년 이후 Quad 안에서 'ASEAN의 중심성'에 관한 논의에 언급하며 배타적 성격이 유동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호, 일-인 양자 관계

아베는 무엇보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양국관계 발전과 외교·안보 협력 강화에 노력했다. 우선 외교청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호, 일-인 안보협력관계 발전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1) 일-호 협력 관계

[표 1] 일본-호주 협력관계의 발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 '일·호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발효. 일본-호주 공동 훈련, PKO 나 국제긴급원조활동에서의 협력을 촉진. • 5월 : '정보보호협정(ISA)' 발효. • 10월 : 5차 미·일·호 장관급 삼각협력대화 (TSD) .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 아베 정권과 애벗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5차 2+2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월 : 일본-호주 간 '21 세 기를 향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 또한 양국은 '방위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
2015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월 : 6 차 2+2 개최. 방위협력의 과제를 공유하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해양안보, 미국과 인도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 12 월 : 공동성명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음 걸음'을 발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특별한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강조.
2016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월 :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태평양 협력을 위한 일호전략'을 발표. 7 월 : 6 차 미·일·호 TSD 개최. 자위대, 미군 및 호주군이 공동 훈련 실시. 10 월: 미·일·호 방위당국 간 정보공유를 동의.
2017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 : 신 '일·호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체결. 4 월 : 7 차 2+2 에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지역·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 8 월 : 7 차 미·일·호 TSD.
2018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월 : 8 차 미·일·호 TSD. 10 월 : 8 차 외교·방위 장관협의(2+2) 개최. 8 월에 취임한 모리슨 정권 하에서도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확인.
2019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월 : 미·일·호 TSD.

출처: 외무성 『外交青書』 2013 년-2020 년;

외무성 홈페이지, “오스트라리아連邦 (Commonwealth of Australia) 基礎データ”<https://www.mofa.go.jp/mofaj/area/australia/data.html#section5>.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은 2010년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2012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조인, 그리고 2010년부터 정례화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실시 등이 보여주듯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양국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 층 깊은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2014년의 발표는 일-호 협력관계의 긴밀도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2014년 7월 8일 아베는 일본 총리로서 최초로 호주 연방 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하였다. 아베는 ‘특별한 관계’가 된 일-호가 함께 태평양부터 인도양의 광대한 바다와 그 하늘을 완전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정상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여,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운영 및 공동훈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향해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방위장비·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제조가 포함된 일-호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에 양국이 서명한 것을 밝혔다.⁹⁸ 2010년대 아베 정권 시기에 들어 일본과 호주의 양자관계는 사실상 동맹에 준할 정도(quasi-alliance)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⁹

2010년대에 일호 양국 안보협력이 가속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베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대중 견제 인식과 지정학적 관점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양에 면한 도서국가로 FOIP 구상에 있어 지적학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평화안전법제 성립 등 아베 정권 시기 실현된 일련의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다. 2015년 11월 6차 2+2에서 호주는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에 의거하여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평화안전법제가 성립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¹⁰⁰ 또한 호주는 일본의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검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방위장비

⁹⁸ 「安倍総理とアボット首相 共同声明 “21世紀のための特別な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2014년 7월 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44775.pdf>,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20일).

⁹⁹ 윤도원, 2018, p. 40.

¹⁰⁰ 「第6回日豪外務・防衛閣僚協議共同コミュニケ(仮訳)」 (2015년 11월 22일),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2015/pdf/20151122_aus-j_a_jcom_j.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품·기술의 이전에 관한 새로운 원칙(방위장비이전 3 원칙)의 성립을 지지하였다. 2017년 1월 새로운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의 체결도 일본의 평화안전법제를 토대로 자위대와 호주군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재검토된 결과다.

2) 일-인 협력 관계

[표 2] 일본-인도 협력관계의 발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 싱(Manmohan Singh) 총리가 방일하여, 정치·안보 및 경제 면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를 확인.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양국 수상은 일-인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및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 기시다 외상은 12월 재임 후 첫 외국방문으로 인도를 선택하여, 일-인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 12월 :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일인 신시대(日印新時代)」를 목표로 공동성명 ‘일인 비전 2025 특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동’을 발표했다. 12월 12일 ‘비밀군사정보 보호협정’ 발효.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발효. 11월 : 장성회담을 통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인 ‘액트 이스트(Act East)’의 연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일-인이 기여하는 것을 논의.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 원자력협정 발효. 9월 : 아베 총리가 인도(모디 수상의 고향)를 방문하여, 일인공동성명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한 인도-태평양

	을 향해서”를 발표. 연결성, 방위장비협력, 미·일·인 연대의 촉진, ODA 지원의 확증 등을 확인.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월 : 각료급 외교·국방장관 회의(2+2)의 개최, 연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일-인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에 관한 교섭 개시 등 FOIP 실현을 위한 협력을 표명. • 12 월 : 미호 공동 훈련에 일본이 옵서버로 참여.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월 : 일인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의 안보·방위 협력, 미·일·인/미·일·호·인 등 다자간 협력,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출처: 외무성 『外交青書』 2013년-2020년;
외무성 홈페이지 “インド共和国 (Republic of India) 基礎データ”
<https://www.mofa.go.jp/mofaj/area/india/data.html#section5>

일-인 관계도 아베 정권 시기에 큰 발전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인도는 2006년에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후 각자 국가에 상호 방문하면서 거의 매년 정상회의를 진행해 왔다. 정치·안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긴밀한 연대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왔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해상 자위대와 인도 해군과의 양국간 해상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해상 안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베는 인도에 대한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외교를 전개하여 신뢰 관계 및 안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2014년 9월에는 양국이 일본-인도 간 ‘특별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도쿄선언’을 발표하여, 일본과 인도의 관계를 보다 깊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5년 1월 기시다 외상은 인도 방문 시 인도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시대를 위한 특별 파트너십’이라는 연설을 했는데, 그는 “일본은 인도와 특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⁰¹

¹⁰¹ 「岸田外務大臣スピーチ「インド太平洋時代のための特別なパートナーシップ」」 (2015년 1월 1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22_001770.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또한 아베는 2016년부터의 FOIP 전략에 있어 인도를 FOIP을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 모디와 정상회담 동안에 그 구상의 중요성을 반복했다.¹⁰² 예컨대, 2016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모디에게 FOIP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아베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인 ‘액트 이스트(Act East)’의 연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일-인이 주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¹⁰³ 그 결과, 모디가 FOIP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본의 더 많은 관여를 높이 평가한 문구를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¹⁰⁴

2017년 9월에 아베와 모디는 정상회담을 진행 후, 공동성명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한 인도-태평양을 향해서”를 발표했다.¹⁰⁵ 이것은 안보·방위 협력 강화, 연결성 향상, ASEAN 과의 강한 유대 등을 촉진하는 데 FOIP의 전략적 가치를 양국에서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SEAN’에 대한 일본과 인도의 관여를 향후 목표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ASEAN에 관한 일-인 정책대화의 심화, ASEAN 지역포럼(ARF),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의 ASEAN 주도 포럼을 통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이 공동성명을 통해 FOIP 전략은 인도의 북동부 지역 개발 지원과 연결되었다. 일본이 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협력기구(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동북 도로 네트워크 연결 개선 프로젝트(North East Road Network 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를 위한 ODA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와 협약을 체결했다.¹⁰⁶ 즉, 인도는 안보·방위 협력에 더하여 대 ASEAN 정책, 인프라

¹⁰² 김석수, “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세계지역연구논총』 (2019), p. 220.

¹⁰³ 「日印首脳会談」(2016년 11월 11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3_001879.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⁰⁴ 「日印共同声明」(2016년 11월 11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203259.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⁰⁵ 「日印共同声明「自由で開かれ、繁栄し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2017년 9월 1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290053.pdf>; 「日印首脳会談」(2017년 9월 1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4_003293.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⁰⁶ 김석수, 2019, p. 221.

라 지원 등 측면에서 일본의 FOIP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었으며, 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양자와 소다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2. 3 개국 협의의 형성 과정과 제도적 발전

1) 아베의 대중 견제 안보 협력 구상

다음으로 Quad 형성에 영향을 준 미·일·호, 미·일·인 3국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 관계 즉, Quad 는 2016 년에 ‘자유롭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기 전부터 대중전략이라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7 년 8 월 22 일 인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두 대양의 합류 (Confluence of the Two Seas)’라는 연설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과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이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확대된 아시아’라는 지역을 출현시키고자 했다.¹⁰⁷ 아베 총리는 일-인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¹⁰⁸

태평양과 인도양은 오늘날 자유로운 해양, 번영의 바다로서 다이나믹한 결합을 초래하고 있다. 종래 지리적 경계를 돌파할 “확대 아시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투명한 바다로 만드는 힘과 책임이 일본과 인도에는 있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일-인 간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 파트너십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결합이다. ... 일본 외교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외연에 따라서 ‘자유와 번영의 호(弧)’로 불리는 원이

¹⁰⁷ 大庭三枝, “日本の「インド太平洋」構想,” 『国際安全保障』 第46巻 第3号 (2018), pp. 12-32. 재인용: 조은일, 2020, p. 78.

¹⁰⁸ 「"Confluence of the Two Seas" Speech by H.E.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22, 2007),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2022년 10월 13일).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러 구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도 바로 이의 핵심이 된다. ... 일본과 인도가 연결됨으로써 “확대 아시아”는 미국이나 호주를 연루하여 태평양 지역 전체까지 포함된 커다란 네트워크로 성장될 것이다.

이상 발언을 통해, 일본은 인도를 “확대 아시아”에 위치하는 민주주의국가로 인식하여, 인-일 파트너십에 미국 및 호주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적 네트워크를 태평양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했던 아베 수상의 구상을 알 수 있다. 즉, 대중전략으로서 Quad 협력 구상이 제 1 차 아베 정권의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 년대에 제안된 Quad 는 중국의 항의, 당시 호주와 인도 양국 모두의 소극적 참여 그리고 제 1 차 아베 내각 다음 후쿠다(福田康夫) 내각의 정책 변화로 인해 본격화되지 못하였다.¹⁰⁹

2012 년 12 월에 다시 정권 복귀한 아베는 이 구상을 토대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계성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성숙한 해양민주국가인 일본은 인도양과 태평양 서부 지역(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의 하와이주)을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전략 공간을 설정하고, 관련 4 개국 외에 최종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도 참가하는 안보연대(연례협의, 소규모 군사연습 등)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아베 수상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태평양의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와 불가분이다. ... 남중국해는 「北京湖 (Lake Beijing)」로 되어 가고 있다.¹¹⁰

중요한 것은 태평양에서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가 인도양에서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조한 것이다. 아베의 그 사설은 남중국해(SCS: South China Sea)가 ‘중국의 호수(Lake Beijing)’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¹⁰⁹ 佐竹知彦, “中国の台頭と日米豪安全保障協力の強化—2000年代を中心に—,” *International Security*, 40.4 (2019), p. 77; 윤도원, 2018, p. 38.

¹¹⁰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2012년 12월 27일) <https://www.project-syndicate.org/magazine/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barrier=accesspaylog>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검색).

로 중국에 대한 아베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 관심을 받았다.¹¹¹ 즉, 제 2 기 아베 정권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아베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Quad 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들어냈으며, 이로써 Quad 는 대중전략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아베의 적극적인 태도의 결과, 여러 협의체가 형성되었다. 이후 2012 년 일본 아베 총리는 인도, 일본, 미국, 호주로 이어지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통해 ‘확대 아시아’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지전략적 공간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2016 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구상을 밝혔다.

2) 3 개국 협의의 발전

(1) 미·일·호 (日米豪)

2010 년대 미·일·호 및 미·일·인 간 다자안보협력 심화됨에 따라 미·일·호·인 4 개국 간의 협력관계가 점차 체계화되었다. 미국, 일본, 호주는 2013 년 10 월에 제 5 회 장관급 삼각협력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기시다 외상은 해양에 있어 ‘힘’이 아닌 법의 지배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센카쿠 제도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¹¹² 즉, 여기서 일본의 관심사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이었고, 해양의 안전 문제에 대해 미·일·호가 협력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3 개국은 2015 년 5 월 30 일 5 차 미·일·호 방위장관회담을 진행하고, 여기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라고 표현했다.¹¹³ 미·일·호의 방위장관들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힘의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공사에 대해 심

¹¹¹ 김석수, 2019, p. 213.

¹¹² 「第5回 日米豪閣僚級戦略対話(TSD)概要」(2013년 10월 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kaidan/page3_000462.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¹³ 「日米豪防衛相会談共同声明」(2015년 5월 30일),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2015/pdf/20150530_aus-j.pdf; 『日本経済新聞(Web)』, (2015년 5월 31일), 「日米豪、南シナ海「深刻な懸念」 中国をけん制」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30H48_Q5A530C1PE8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해양안보 및 방위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따라서 3 국 간의 협력 목적으로 중국 견제가 명확화되었다.

아베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울 한 달 전인 2016년 7월에 제 6 회 TSD가 열렸다. 여기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 테러 대책 등에 관해 3 개국에서 긴밀하게 연대·협력하는 것을 확인했다.¹¹⁴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해양 분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일방적인 행동의 자제, 국제 해양법 원칙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기시다 외상이 동중국해의 형상을 설명하였고, 각 국의 장관들은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높이는 모든 강제적 혹은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표명했다. 2016년 이후 미·일·호 TSD는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게 되었다.

2017년 8월 필리핀에서 동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TSD를 개최하여, 지역 안전과 3 개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 자는 미호동맹 및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는 파트너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국제법의 존중, 열린 경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공통의 이익과 가치로 지탱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3년 만에 미·일·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를 주도하기 위해 미·일·호 간의 결속을 확인했다.¹¹⁵

2018년 8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8 회 미·일·호 TSD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3 자의 입장을 일치시켜, 자유롭고 열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 및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강조했다.¹¹⁶ 3 자는 지역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타국의 강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항행의 자유 및 항해의 이용 유지, 시장 개방성 유지 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해양안보의 능력구축 지원을 위해 3 개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¹¹⁴ 「第 6 回 日米豪閣僚級戰略對話(TSD)」 (2016년 7월 26일), https://www.mofa.go.jp/mofaj/a_o/ocn/page3_001739.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¹⁵ 「日米豪首脳會談」 (2017년 11월 13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ocn/page3_002291.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¹⁶ 「第 8 回 日米豪閣僚級戰略對話(TSD)」 (2018년 8월 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ocn/page4_004256.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2) 미·일·인 (日米印)

한편, TSD 와 별개로 미국은 일본 및 인도와도 소다자 안보협력을 가동하고 있다. 미·일·인 3 국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2015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 년 9 월 30 일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3 국은 뉴욕에서 1 차 외교장관 회담(日米印外相會合)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 국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려고 했다.¹¹⁷ 2011 년부터 미·일·인 국장급회의는 7 회 진행되었으나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미·일·인 3 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보다 심화되는 회담이 되었다. 외교장관 3 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 개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을 강조했다며, 해양 안보의 유지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3 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정치·안보 기구로 ASEAN 의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해당 지역에서 대화 자리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지역 연결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 다음 달, 일본 해상 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ce Force, JMSDF) 함정이 벵골 만에서 개최된 말라바르 합동 해상 훈련(Malabar joint maritime exercise)에 참가했다. 2015 년 이후 이 말라바르 훈련은 미·일·인 3 국의 대중 훈련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일·인 3 국 파트너십의 첫 번째 실질적인 결과를 주었다.¹¹⁸ 더욱이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와 인도 양국은 2014 년 11 월 「안보협력을 위한 지침」(Framework for Security Cooperation)을 체결했으며, 지침의 내용에는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정기적인 해상군사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6 년 미인일 3 개국이 연합하여 진행된 말라바르 훈련 직후에 인도와 호주의 해상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즉, 인도와 호주의 군사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¹¹⁹

중요한 것은 FOIP 전략이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사이의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3 개국은 2017년 9월에 2차 미·일·인 외교장관회담이 뉴욕에서 개최하여,

¹¹⁷ 「日米印外相會合」(2015년 9월 30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page3_001394.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¹⁸ 김석수, 2019, p. 218-219.

¹¹⁹ 윤도원, 2018, p. 40.

해양안보·지역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¹²⁰ 각국 외교장관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말라바르 합동 해상 훈련으로 대표되는 해양안보 분야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일·인 3국 협력 관계는 2018년에 들어 보다 심화된다. 2018년 11월 일본 아베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는 처음으로 미·일·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¹²¹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인 3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다음 년 2019년 6월에는 2차 미·일·인 정상회담이 열렸다.¹²² 여기서 3국 수상들은 복잡화되는 안보 환경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 및 추진을 위해서는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3개국 의견은 해양안보, 우주·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그리고 양질의 인프라 투자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3. 대중 경쟁 전략으로서의 Quad

1) Quad의 형성

이렇듯 아베 정권 시기에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개념을 토대로 미·일·호 및 미·일·인 삼각 안보협력 관계가 가속화되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민주주의 국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4국간 양자 또는 삼자 회합이 있을 때마다 Quad

¹²⁰ 「日米印外相会合」(2017년 9월 1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na/na1/page4_003306.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²¹ 「日米印首脳会談」(2018년 11월 30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6_000229.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²² 「日米印首脳会談」(2019년 6월 2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s_sa/sw/page3_002794.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¹²³ 이러한 다자안보 흐름 속에서 미·일·호·인 4국 안보협력 즉, Quad가 동시에 형성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제1차 아베 정권 시기에도 이 4국 간의 다자협력은 대중 전략으로 부상하였고, 2007년 5월에 실무급 회담이 개최된 바가 있다. 다만, 중국의 항의, 당사국들의 소극적 태도, 일본 국내 정치적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담 자리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Quad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은 과거와는 대별될 정도로 그 빈도와 내용 모두에서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Quad 협력의 제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이 서태평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양 지대에서 격화되는 현실적 조건도 크게 작용했다.”¹²⁴ 즉, “중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두되었던 것이다.”¹²⁵ 2017년 10월 Tillerson(Rex Tillerso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인도 방문을 앞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및 해양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일·호·인 4국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²⁶ 이어서 일본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도 10월 25일 미·일·호·인 4국의 정상회담, 국장급 회의 등 전략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인도-태평양 시레인(해상교통로)의 방위협력과 자유무역을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다.¹²⁷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을 통해 “나는 평화와 안보를 제고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¹²³ 박재적, 2019, p139.

¹²⁴ 윤도원, 2018, p.39.

¹²⁵ 조양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및 강선주, 2018, 『지경학(Geoeconomics)으로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재 인용: 윤도원, 2018, p.39.

¹²⁶ 林賢參,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競争から協調へ—,” 『日本学報』, no. 121 (2019), p. 260.

¹²⁷ 『日本経済新聞(Web)』 (2017年10月26日), 「河野外相「日米豪印で戦略対話」 貿易・安保、中国にらみ」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22692990V21C17A0MM8000/>, (최종 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검색).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2017년 11월 6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시 아베 총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미일이 함께 주도권을 쥐면서 전개하는 데 합의하였다.¹²⁸ 그 결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대화가 부활하였다.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자리를 이용하여, 10년 만에 미·일·호·인 국장급 4자협의 Quad가 재개되었다.¹²⁹ 각국 대표단들은 이 협의에서 인도-태평양의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보장하는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이로써 4개국 간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국제질서가 공통의 이익으로 인식되었다. 2018년 1월에는 미·일·인·호의 자위대와 해군 수뇌가 인도 뉴델리에서 중국이 해양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⁰

아베는 Quad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국 및 3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 2017년 9월 일인 정상회담, 11월 미·일·호 정상회담, 2018년 1월 일호 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담을 통해 Quad 간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시키고자 했다. 일본은 미일이 중심이 되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방위협력 등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 인도를 포함한 Quad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인식했다.¹³¹ 아베 정권 시기 Quad의 발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²⁸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Quad 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 23 권 제 2 호 (2018), p. 27.

¹²⁹ 「日米豪印のインド太平洋に関する協議」 (2019년 6월 2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5249.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³⁰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2018, p. 27.

¹³¹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2018, p. 28.

[표 3] Quad 국장급 협의 및 외교장관 회담

국장급 협의	
2017년 11월 12일	미·일·호·인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협의 (日米豪印のインド太平洋に関する協議)
2018년 6월 7일	미·일·호·인 협의 (日米豪印協議)
2019년 5월 31일	미·일·호·인 협의 (日米豪印協議)
2019년 11월 4일	미·일·호·인 협의 (日米豪印協議)
미·일·호·인 외교장관 회담	
2019년 9월 26일	미·일·호·인 외교장관 회담 (日米豪印閣僚級會議)
2020년 10월 6일	2차 미·일·호·인 외교장관 회담 (第二回日米豪印外相會合)

출처: 일본 수상관저, “Quad”

https://www.kantei.go.jp/Quad-leaders-meeting-tokyo2022/index_j.html;

외무성, “外交政策 日米豪印”

https://www.mofa.go.jp/mofaj/fp/nsp/page1_001173.html.

이상 Quad 의 형성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 년대에 들어 미·일·호 및 미·일·인 3 개국 대화가 제도화되었는데, 여기서 주된 토론 주제는 ‘해양안보’이었다. 둘째, 2016 년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후, FOIP 개념이 미·일·호, 미·일·인 3 국 협력을 보다 깊은 것으로 강화할 새로운 축으로 작용되었다. 3 개국은 법의 지배, 국제법의 존중, 열린 경제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확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Quad 는 FOIP 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2017 년 일본의 FOIP 을 미국이 외교전략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Quad 의 제도화가 실현되었다. 특히 2016 년부터 2017 년에 들어, 급속하게 Quad 가 부활한 배경에는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

Quad 는 대화 자리 뿐만 아니라 공동 훈련 등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중국의 전략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공동체로 발전되었다. Quad 의 발전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3 개국 혹은 4 개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현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 Quad 는 미일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 경쟁 전략의 성격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Quad 이며, Quad 의 안보·방위 협력이 초기 FOIP 의 핵심이었다.

다만, Quad 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기구를 목적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은 맞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구체적인 안보 군사 협력의 의미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컨대, 2021 년 9 월에 1 차 정상회담 시 4 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 문제, 인프라, 기술, 인적 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동성명 문서를 통해 발표했으며, 직접적인 군사 또는 안보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¹³²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인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4 개국 협력이 중요시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Quad 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더 나아가, Quad 는 외교, 안보 뿐만 아닌 경제 측면에서도 대중 경쟁을 목적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은 2013 년에 국가전략으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일대’는 육지로 다니는 길을, ‘일로’는 바다로 다니는 길을 뜻하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광역 경제권 구상이다.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기금을 창설하였다.¹³³ 일대일로 전략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⁴ 한편, Quad 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질 높은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경제적 번

¹³²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2019 년 6 월 28 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files/100238179.pdf>, (최종검색일: 2023 년 1 월 23 일).

¹³³ 崔天運(Cheon Woon Choi)·李相萬(Sang Man Lee), “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45 (3) (2021), p. 148.

¹³⁴ 임경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제 22 집 제 4 호 (2019), p. 86.

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는 일본 FOIP 도 마찬가지이다. 아베 총리는 2015 년 5 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아시아 개발은행 (ADB)와 연결해 5 년간에 약 1100 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¹³⁵ 게다가 2018 년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위치하는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3 년 간에 약 500 억달러를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¹³⁶ 즉, Quad 가 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면, 중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지원 전략인 일대일로과의 대립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018 년 7 월에 미국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상공회의소 주관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착수금으로 총 1 억 1300 만달러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¹³⁷ 이로써 Quad 로 상징되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축에 더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여 지경학적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접근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2018 년 10 월에는 펜스(Michael Pence) 부통령이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에 관한 연설(“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을 진행해, 거기서 일대일로에 대해 ‘채무의 덫(Debt trap diplomacy)’이라고 비판하였다.¹³⁸ 미국은 중국의 경제원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DFC) 설립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제도 구축을 진행하였다.¹³⁹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구조는 2017 년 말부터 미국 트럼프 정권이 대중 경쟁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¹³⁵ 「質の高いインフラ 日本の取組」(2021년 8월 25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bunya/infrastructure/initiative.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³⁶ 『日本経済新聞 (Web)』, (2018년 6월 11일), 「首相 インド太平洋地域へ3年で5.5兆円投融资」,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1618560R10C18A6MM8000/>; 神保謙, “「インド太平洋」構想の射程と課題,” 『国際安全保障』, 第46巻 第3号 (2018), P. 6.

¹³⁷ 박재적, 2019, p. 139.

¹³⁸ 武田紀久子, 「ペンス演説に見るトランプ政権の対中政策 ~海外インフラ投資強化と日本への含意~」(2018년 10월 23일), 国際通貨研究所 https://www.iima.or.jp/docs/column/2018/1023_j.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검색).

¹³⁹ 中山泰則 「ペンス米副大統領演説のもつ戦略的意義」(2018년 11월 9일),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strategic_comment/column-320.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소다자 협력 관점에서는 2018년 11월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인도-태평양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에 있어 협력하는 것을 확인한 미·일·호 정부의 “인도-태평양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3기관간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¹⁴⁰ 공동성명에서 특히 3국이 강조한 것은 역시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등 국제 수준이다.

‘3 기관간 파트너십’은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의 우선적인 인프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제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에 있어서의 증강제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중요한 것은 ‘3 기관간 파트너십’은 개방성, 투명성 및 재정 지속성을 포함한 개발에 관한 국제 수준이나 원칙을 준수한 인프라 사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 정부와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 이 접근은 이 지역 국가에 있어서의 비지속적인 채무 부담을 피하면서, 지역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⁴¹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여기서 “비지속적인 채무 부담”이라는 표현은 중국 일대일로로 인한 ‘채무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일·인 간에서도 3자 정상회담 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촉진이 확인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일부 사업이 카슈미르 지역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대일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했다. 2017년 6월에 인도 모디 수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실시했을 때,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⁴²

따라서, Quad 소다자 안보협력은 경제 분야까지 연결되어 경제안보적 역할을 가진 전략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수준에 준한

¹⁴⁰ 「日米豪政府の「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インフラ投資に関する日米豪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共同声明」(2018년 11월 17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ocn/au/page4_004509.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⁴¹ 「日米豪政府の「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インフラ投資に関する三機関間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共同声明(仮訳)」(2018년 11월 17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20367.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⁴² 『日本経済新聞 (Web)』, (2017년 6월 28일), 「米印首脳会談、「一帯一路」に懸念示唆 ビザ問題は触れず」,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GM27H5Q_X20C17A6FF1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질 높은 인프라투자 축진은 Quad 협의에서도 확인되어 온 내용인데, 이는 미국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점차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하는 것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대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의 배타적인 성격 변화는 안보 및 경제에서 Quad 관계가 심화가 된 것에 기인한다.

4. 배타적인 성격의 유동화?

대중 경쟁을 위한 소다자 안보협력으로 Quad 가 형성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배타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2018년쯤부터 이 Quad 의 배타적인 성격 약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7일에 개최된 미·일·호·인 4자협의에서는 “개방적이며 투명성이 있고 포괄적(inclusiv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¹⁴³ 이 변화는 2018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의 인도 모디 총리의 연설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연설에서 모디는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인도-태평양지역이 “한정된 국가에 의한 조직이나, 무언가를 지배하는 틀이나, 어떠한 국가에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①자유롭고 열린 포괄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 ②ASEAN의 중심성이 평화와 안전한 지역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③대화와 공통의 규칙을 기반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것, ④자유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것, ⑤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것, ⑥대국 간 경쟁의 장소로 만들지 않는 것 총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즉, 모디의 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 발전과 번영 추구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지역 (free, open, inclusive region)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변경하면서, 4개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ASEAN의 중심성(centrality)”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초기 Quad는 국가간 배타적인 협력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포괄적이지 못한 배제적인 지역인식을 드러냈는데, 2018년쯤 ASEAN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배타적인 성격의 약화와 인도-태평양의 재설계가 시도되었다.

¹⁴³ 「日米豪印協議」 (2018년 6월 7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6095.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한편, 코로나 시대 이후 2022 년 현재 시점 Quad 는 다시 배타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 년 3 월 12 일에는 처음으로 Quad 4 개국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4 개국은 코로나 백신 조달, 기후 문제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¹⁴⁴ 이 배경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인식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및 군사력 확대에 대항하는 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2 년 10 월 12 일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안보전략이 발표하였는데, 거기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평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칭하며,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10 년 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¹⁴⁵ 이렇듯 Quad 의 배타적 성격과 포괄적 성격은 장기적 상황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 뿐만 아닌 미국의 대외정책도 포함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존재하는 것 처럼 미중 간 대립은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Quad 는 중국과 미국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¹⁴⁴ 「日米豪印首脳テレビ会議」 (2021 년 3 월 13 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p/nsp/page1_000939.html ,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¹⁴⁵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p. 23, (2022 년 10 월 12 일)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V. 일-ASEAN 관계 속 안보협력

냉전 종전 이전 일본은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동남아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1990 년대에 들어 다자안보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일본과 ASEAN 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이 5 장에서는 제 2 차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협력의 발전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SEAN 입장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의 전개 과정

ASEAN 은 1967 년 8 월 8 일 방콕 선언에 따라 설립된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체다. 창설 당시 가맹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의 5 개국이었으나, 1984 년 브루나이, 1995 년에 베트남, 1997 년 라오스, 미얀마, 1999 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가맹국은 총 10 개국으로 늘어났다.¹⁴⁶

냉전 종전 이전 일본은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동남아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후쿠다 독트린(福田ドクトリン)은 전후 일본이 처음으로 발표한 동남아시아 외교 원칙·지침이다. 1977 년 8 월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버마¹⁴⁷을 순방하였다. 마지막 방문국이었던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조 연설을 했으며, 거기서 발표된 세 가지 일본의 대 동남아 외교 원칙은 향후 ‘후쿠다 독트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⁴⁸ 그리고 동남아 정책의 중심적 역할로 일본의 ODA 가 강조되었다. 후쿠다는 연설에서 “향후 5 년 간에 정부개발원조를 배증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 방침으로 표명하

¹⁴⁶ 「ASEAN 概況」(2019 년 10 월 7 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page25_001325.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¹⁴⁷ 당시 ASEAN 비가맹국

¹⁴⁸ 林賢參, “安倍内閣の東南アジア外交とインド太平洋戦略,” 『問題と研究』, 第 47 卷 2 号 (2018), p. 101.

였다.¹⁴⁹ 이로써 일본의 경제협력과 지원이 크게 증대되었다. 후쿠다 독트린 이후 전개된 ODA는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과 평화외교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¹⁵⁰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야기된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과 아세안은 정치·외교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일본은 1992년 9월부터 PKO 협력법에 따라 자위대와 문민경찰을 캄보디아로 파견하여, 국가 재건에 공헌하였다.¹⁵¹ 즉, PKO 활동을 통해 일본과 ASEAN 상방은 다자안보협력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냉전 종결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ASEAN은 10개국 체제로 발전되었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ASEAN을 포함시킨 지역 안보 틀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적극적인 입장은 ARF 설립과정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4년에 7월에 ARF가 창설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가 안보분야에도 확대되어, 일본의 대동남아 다자안보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ASEAN 간의 협력은 1997년 이후 일본-ASEAN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ASEAN+3의 실현을 걸쳐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ASEAN+3란 1997년 12월 제 1회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에 구성된 협동포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¹⁵² 제 1회 ASEAN+3가 열린 것은 1991년 일본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수상이 일-ASEAN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다.¹⁵³ 의장국이었던 말레이시아는 하시모토의 제안을 고려하여, 1997년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ASEAN 정상회의에 맞추어 일-ASEAN 정상회의와 함께 한중일 3개국과 ASEAN의 수상회의를 검토했다. 즉, ASEAN 국가는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강화도 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ASEAN+3의 구체화 과정에서 1997년 7월 아시아 외환위기가

¹⁴⁹ 大庭三枝, “第7章 『吉田ドクトリン』を超えて——一九九〇年代——,” 宮城大蔵(編) 『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 (ミネルヴァ書房, 2015).

¹⁵⁰ 이지영,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 28권 제 4호 (2018), p. 128.

¹⁵¹ 林賢參, 2018, p. 102; 「カンボジア和平及び復興への日本の協力」(2007년 1월),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cambodia/kyoryoku.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⁵² 「ASEAN+3 (日中韓) 協力」,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asean3/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⁵³ ASEAN+3 창설 전개 과정과 일본의 관여에 대해서는 <大庭三枝, “第7章 『吉田ドクトリン』を超えて——一九九〇年代——,” (宮城大蔵(編), 2015)> 를 참고하였다.

일어났다. 이 위기 속에서 열린 1997년 12월에 제1회 ASEAN과 한중일 3개국과의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에 대처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외환위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1998년 12월에 제2회 ASEAN+3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일본 오부치 케이조(小淵惠三) 수상은 약 300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책인 “신미야자와구상(新宮沢構想)”를 발표하여 금융위기에 처한 ASEAN 국가와 한국에 대해 원조를 진행하는 것을 표명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후 ASEAN+3의 정례화가 결정되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ASEAN+3라는 장소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과의 대화 및 협력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였다. 1998년 12월 제2회 ASEAN+3 정상회의 개최 시, 오부치 수상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3개국 간 정상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중일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해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결국 회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7월 오부치 수상이 중국을 방문 후, 동년 12월 제3회 ASEAN+3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제안하였고, 양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중일이 만나는 자리가 실현되었다. 한편, 일본과 ASEAN의 협력이 진행되는 속에서 일본, 중국 간의 마찰도 부각되기도 하였다.¹⁵⁴ 2000년에 들어 중국은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ASEAN+3에서 리더십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일본의 대동남아 외교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 ASEAN 외교는 ODA를 통한 경제 지원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는 전후 일본의 신뢰성 회복이 주요 과제였다. 둘째, 캄보디아 PKO 파견을 계기로 하여 일-ASEAN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목적으로 ASEAN을 포함시킨 지역 안보 틀인 ARF가 창설되었다. 셋째, 1997년 이후 일본-ASEAN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ASEAN+3의 실현을 통해, 일-ASEAN 협력관계의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넷째, ASEAN+3 같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협력은 중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일 관계를 좌우할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¹⁵⁴ 林賢參, 2018, p. 104.

2. 제 2 기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안보협력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다자안보는 Quad 의 등장 그리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미일동맹 강화가 주된 목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 년 아베가 FOIP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이 추세는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아베 정권 시기 일본과 ASEAN 과의 다자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한 외교·안보 전략이다. 일본의 ‘다자간 안보’는 ASEAN 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포럼인 ARF 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1990 년대부터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다자안보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ASEAN 국가들과의 다자안보 대화 및 협력을 아베 총리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2014 년 방위백서 제 3 장 제 1 절 「2. 다자간 안전보장 틀·대화에 관한 노력」에서는 주로 3 가지 안보정책이 소개되고 있다.¹⁵⁵ 첫째,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의 노력,’ 둘째, ‘ASEAN 지역포럼(ARF),’ 셋째, ‘방위성·자위대가 주최하는 다자안보대화’ 총 3 가지다. 방위성·자위대가 주최하는 대화 자리로 도쿄 방위 포럼과 일-ASEAN 제국 방위 당국 차관급 회의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다자안보 틀은 모두 ASEAN 이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2014 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능력구축지원’에 관한 언급이 증가하였는데, 이 정책은 양자 차원의 대 ASEAN 안보협력정책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전략’에서 ‘구상’을 바꾼 2018 년 이후, 일본은 Quad 보다 ASEAN 을 중요한 협력자로 강조하게 되었다.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역점이 Quad 에서 ASEAN 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8 년 12 월 18 일 각의 결정된 신방위대강을 보면, 2013 년 방위대강에는 없었던 ASEAN 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¹⁵⁶ 본 방위대강에서는 일본과 ASEAN 과의 협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¹⁵⁵ 「平成 26 年版防衛白書」 제Ⅲ부 제 3 장 제 1 절, (2014 年),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4/html/n3312000.html, (최종 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¹⁵⁶ 「平成 31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 15, (2018 년 12 월 18 일),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20181218.pdf>, (최종 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동남아 국가들과는 지역협력의 핵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성·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하여 공동 훈련·연습, 방위장비·기술 지원, 능력 구축 지원 등 구체적인 약국간,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내세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ASEAN 과의 협력이 포함됨으로써 일본의 동남아 다자안보정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2018 년 이후 ‘FOIP 의 중심점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 내각은 ASEAN 의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포괄적인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아베 정권 시기 일본과 ASEAN 의 협력 관계 발전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교관계

제 2 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2013 년 일년 간에 ASEAN 10 개국 모두 방문하였고, 기시다 외상은 모든 가맹국 외무장관 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동년 12 월에는 일-ASEAN 특별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여, 해양안보 및 항행·비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 강화하는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2014 년 외교청서를 통해 ASEAN 이 지역협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2013 년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ASEAN 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논했다.¹⁵⁷

[표 4] 아베 총리의 동남아 방문 실적

날짜		방문 내용	방문 국가
2013 년	1 월 16-19 일	국가방문(양자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5 월 24-26 일	국가 방문(양자간)	미얀마

¹⁵⁷ 「平成 26 年版外交青書」 “第 1 章 概観”, (2014 년 4 월),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4/pdf/pdfs/1.pdf>, (최종검 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7 월 25-27 일	국가 방문(양자간)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10 월 6-10 일	APEC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11 월 16-17 일	국가 방문(양자간)	캄보디아, 라오스
2014 년	5 월 30-31 일	상그릴라 안보대화	싱가폴
	11 월 12-17 일	ASEAN 관련 정상회의	미얀마
2015 년	4 월 21-23 일	아시아-아프리카 60 주 년 기념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11 월 18-23 일	APEC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2016 년	9 월 4-9 일	ASEAN 관련 정상회의	라오스
2017 년	1 월 12-17 일	국가방문(양자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11 월 9-15 일	APEC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베트남 필리핀
2018 년	11 월 14-18 일	ASEAN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싱가폴 파푸아뉴기니
2019 년	11 월 3-5 일	ASEAN 관련 정상회의	태국

출처: 외무성 総理大臣の外国訪問一覧 https://www.mofa.go.jp/mofaj/kaidan/page24_000037.html

林賢參 . 2018. “安倍内閣の東南アジア外交とインド太平洋戦略. 『問題と研究』第47卷2号, p.118.

2013년 1월 아베는 ‘대 ASEAN 외교 5 원칙’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아베는 총리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동남아시아 3국(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을 순방했다. 각국과 정상회담을 개최 하여, 아베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 환경이 변화하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경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ASEAN 과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 18 일날 ‘열린 바다의

현상: 일본 외교를 위한 5 가지 새로운 원칙(The Bounty of the Open Seas: Five New Principles for Japanese Diplomacy)'이라는 제목인 연설에서 '대 ASEAN 외교 5 원칙'이 제시되었다. 아베는 미국이 오늘날 우리가 서있는 두 대양은 융합으로 만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지역인 인도양과 태평양 두 대양의 융합에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는 이 연설에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일-ASEAN 외교의 5 대 원칙을 제시했다.¹⁵⁸

- 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아세안 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간다.
- ② '힘'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은 '공공재'이며, 이를 아세안 제국과 함께 전력으로 지킨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를 환영한다.
- ③ 다양한 경제 체류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 돈, 사람, 서비스 등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일본 경제의 재생으로 연결하여 ASEAN 제국과 함께 번영한다.
- ④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전통을 함께 지키고 키워 나간다.
- ⑤ 젊은 세대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실시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

처음 세 가지 원칙은 두 개의 대양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사상,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유지인 해양이 힘이 아닌 법과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보장하고, 일본 외교의 일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결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ASEAN 국가와의 경제 연대 강화' 및 '일·ASEAN 파트너십 강화'가 확인되었다. 이 원칙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첫째와 둘째 원칙이다. 첫째 원칙이 포함됨으로써 아베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관을 확대하는 '가치관 외교'를 동남아에서 추진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둘째 원칙은 중국의 해양 진출 활동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아시아 관여와 해양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법

¹⁵⁸ 「安倍総理大臣の東南アジア訪問（概要と評価）」（2013년 1월 18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kaidan/s_abe2/vti_1301/gaiyo.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의 지배'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¹⁵⁹ 실제로 아베는 각국 정상들에게 미일동맹 강화 방침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즉, 2013년 첫 동남아 방문을 통해, 아베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베는 이러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에 더하여, 미국을 매개하지 않는 일-ASEAN 협력관계 강화에도 적극적이었다. 2013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와 ASEAN 10개국 정상들은 일-ASEAN 우호 협력관계 40주년을 기념하여, '일·ASEAN 우호 협력에 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실시계획'을 채택했다.¹⁶⁰ 일본과 ASEAN은 ①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 ②번영을 위한 파트너, ③보다 좋은 삶을 위한 파트너, ④마음과 마음의 파트너 총 4가지를 목표로 협력하는 것을 밝혔다. 주로 ①은 안보협력, ②경제 지원, ③사회, 환경 문제에 관한 기술지원·협력, ④민간교류를 의미한다. 이 비전 및 실시계획은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구축을 향해, 일-ASEAN의 파트너십 관계를 재확인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일본은 ASEAN 공동체 구축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 변화되는 지역 구조 속에서 ASEAN의 중심성 및 리더십을 지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발표된 후, 재해지원, 방위협력, 문화교류사업 등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일-ASEAN가 전개되게 되었다.¹⁶¹ 따라서, 2013년은 일본과 ASEAN의 외교협력이 크게 발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 임기 중 ASEAN과는 총 8회 정상회의와 총 7회 외교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¹⁶² 2017년 8월 외교장관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ASEAN 공동체 성립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ASEAN 우호 협력에 관한

¹⁵⁹ 『日本経済新聞(Web)』, (2013년 1월 18일), 「首相が東南アジア新5原則 中国をけん制」,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1803Q_Y3A110C1PP8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⁶⁰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仮訳)」, (2013년 12월 1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22446.pdf>;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 実施計画(仮訳)」, (2013년 12월 14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22448.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⁶¹ ASEAN 일본 정부 대표 지부 홈페이지, https://www.asean.emb-japan.go.jp/abgreet_j.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⁶² 「ASEAN(東南アジア諸国連合) 概況」,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page25_001325.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日・ASEAN 協力」,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j_asean/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되었다.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은 ASEAN 의 중심성과 일체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ASEAN 현장 'ASEAN 2025'에 내용을 반영하여 따라 비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각국 외교장관에게 이야기 했다. 현재까지 일본과 ASEAN 은 이 비전에 따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5] 일-ASEAN 정상회의

2013년	10월 9일	제 16 차 일·ASEAN 정상회의 (브루나이)
	12월 14일	일·ASEAN 특별 정상회의 (일본)
2014년	11월 12일	제 17 차 일·ASEAN 정상회의 (미얀마)
2015년	11월 22일	제 18 차 일·ASEAN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2016년	9월 7일	제 19 차 일·ASEAN 정상회의 (라오스)
2017년	11월 13일	제 20 차 일·ASEAN 정상회의 (필리핀)
2018년	11월 14일	제 21 차 일·ASEAN 정상회의 (싱가폴)
2019년	11월 4일	제 22 차 일·ASEAN 정상회의 (태국)

출처: 외무성, “日・ASEAN 協力”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j_asean/index.html;

외무성, “過去の日・ASEAN 首脳会議”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j_asean/pm_bn.html.

[표 6] 일-ASEAN 외교장관회의

2013년	6월 30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브루나이)
2014년	8월 9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미얀마)
2015년	8월 5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말레이시아)
2016년	7월 25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라오스)
2017년	8월 6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필리핀)
2018년	8월 2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싱가폴)
2019년	8월 1일	일·ASEAN 외교장관회의 (태국)

출처: 외무성, “日・ASEAN 協力”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j_asean/index.html;

외무성, “過去の日・ASEAN 外相会議”

https://www.mofa.go.jp/mofaj/area/asean/j_asean/fm_bn.html

2) 안보·방위협력

ASEAN 은 미중 경쟁의 격화와 동남아 지역 자체의 발전으로 인해 일본에 있어 동남아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 더하여, 안보 전략의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0 년대에 시작된 일-ASEAN 방위교류는 2003 년 일-ASEAN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됨으로써 2000 년대 보다 실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되었으며, 2010 년대에 들어 ADMM-Plus 발족이나 능력구축지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면서 그 관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본-ASEAN 다자간 방위협력에 대해서는 주로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6 년부터 ASEAN 가맹국의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가 개최되어 왔는데, 2010 년 제 4 회 ADMM 에서 일본을 포함한 8 개국(일본,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미국)를 새로 추가하여, ADMM-Plus 가 창설되었고, 동년 10 월에 제 1 회 ADMM-Plus 가 열렸다. ADMM-Plus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방위장관간 회의이기에 일본 방위성은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자간의) 능력구축지원이다.¹⁶³ 해당 이슈의 영역에서는 대테러, 인도지원·재해구조, 해양안보 등 7 가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관한 실천적인 협력이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ADMM-Plus 를 발전 시킨 것으로 일-ASEAN 비공식 국방장관회의(ASEAN-Japan Defense Minister's Informal Meeting)도 존재한다. 2014 년 11 월에 제 1 회가 열린 후, 2016 년 11 월에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 2 회 회의에서 일본 방위성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방위대신은 향후 일-ASEAN 의 방위 지침으로서 “비엔티안 비전(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을 발표하였다. 양자 협력에 더하여 ASEAN 전체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은 다음 3 가지 지원을 제시했다.¹⁶⁴

¹⁶³ 庄司智孝, 「2022 年我が国安全保障の視座③ 日 ASEAN 防衛協力—共通の利益と価値観に基づく協力の拡大へ向けて」, 防衛研究所 NIDS コメンタリー 第 222 号 (2022 年 5 月 24 日),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pdf/commentary222.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3 일) .

¹⁶⁴ 「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日ASEAN防衛協力イニシアティブ~」,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dialogue/j-asean/vientianevision.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3 일) .

- ① ‘법의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의 국제법 인식공유 촉진 지원
- ② 해양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해양 및 상공의 정보수집, 경계감시 등 능력 향상 지원
- ③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안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ASEAN의 능력을 향상시킬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국제법 실시를 위한 인식 공유 촉진, 능력구축지원, 방위장비의 이전·기술협력, 훈련·연습, 인재개발·학술교류 등을 복합적으로 실행한다고 제시되었다. 즉,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ASEAN 전체에 있어 국제법에 관한 인식 공유와 해양안보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대 ASEAN 방위협력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¹⁶⁵ 대동남아의 방위협력 이니셔티브인 비엔티안 비전을 발표한 배경에는 중국의 적극적 해양 진출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복합적 영향이 있다. 이 비전이 발표된 2016 년쯤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필리핀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국제중재 재판소에서의 중국 패소 판결, 중국의 불복 선언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증대한 시기였다. 중국이 진행하는 인공섬 건설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베트남, 일본 등 국가는 유엔 국제 해양법에 따라 대응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일어난 필리핀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ASEAN의 일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ASEAN 내외에서 종종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대 ASEAN 방위 방침이 비엔티안 비전이였다. 정권이 시작된 시기부터 계속 아베가 중시해 온 것이 ‘법의 지배’와 ‘ASEAN의 일체성 및 중심성’이다. 아베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ASEAN의 일체성을 확보하면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전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또한 이 시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재균형 정책이 전개되어, 동맹국으로서 동남아시아의 안

¹⁶⁵ 西田一平太, 「日本の対ASEAN防衛外交: 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とは何か?」 (2018년 8월 24일), 国際情報ネットワーク分析 IINA, <https://www.spf.org/iina/articles/nishida-asean-economy.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보에 대한 일본의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¹⁶⁶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능력구축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방위협력을 보다 촉진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대 ASEAN 방위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비엔티안 비전은 중국의 영향이 강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내륙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ASEAN의 일체성”을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비엔티안 비전 2.0(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 2.0)”다. 2019년 11월 비엔티안 비전이 개정되어, 새로 ‘비엔티안 비전 2.0’이 발표되었다. 이 개정은 비엔티안 비전의 수행 현황을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맥락에서 비전을 재정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¹⁶⁷ 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일본이 다음 3가지 관점에서 대 ASEAN 협력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ASEAN은 인도양과 태평양이 교차하는 지역협력의 핵심 지역이다. 둘째,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관점(AOIP)’에 제시된 이념(개방성, 투명성, 포괄성, 규칙 기반 질서)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 데 ASEAN의 AOIP를 존중하며, ASEAN 국가 및 기본적인 이념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파트너십을 통한 대등한 개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며, 방위장비·기술협력, 훈련, 인재개발, 능력구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ASEAN과의 협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1)일-ASEAN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2)ASEAN의 강인성(強靱性) 강화를 통한 중심성과 일체성에 대한 공헌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제시하였다.

비엔티안 비전과 비엔티안 비전 2.0 모두 동남아시아 방위 역량 강화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위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개의 비엔티안 비전에서 일본은 방위장비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통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위협력을 강화해 나갈

¹⁶⁶ 西田一平太, 「日本の対ASEAN防衛外交：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とは何か？」(2018년 8월 24일).

¹⁶⁷ 「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日ASEAN防衛協力イニシアティブ～のアップデート」(2019년 11월),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dialogue/j-asean/pdf/admm_plus_ewg_a.pdf,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¹⁶⁸ 따라서, 일본은 ASEAN 전체의 능력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ASEAN의 중심성과 일체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와 방위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ASEAN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ASEAN 제국과의 양자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양자간 협력에 대해서는 방위성 자위대가 ASEAN 각국의 국방당국과 방위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원의 전략 대화를 실시해 왔다.¹⁶⁹ 특히 인도네시아과는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2015년에 개최하였고, 캄보디아와는 독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공동훈련에 관해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해군이 2019년 이후 공동훈련을 진행하거나, 자위대 함선을 베트남에 기항하는 것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왔다.

아베 정권에 들어서 특히 확대된 것이 ‘능력구축지원사업’이다. 아베 총리는 ASEAN 국가를 주요한 지원 대상국으로 삼고, 자위대를 파견하여 인도지원·재해구조, PKO, 해양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수행해 왔다.¹⁷⁰ 또한 ASEAN 국가 군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안보와 방위 관련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및 방위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양국간 뿐만 아닌 다자간까지 확대되고 있다.

방위성은 능력구축지원의 목적이 (1)지원대상 국가가 스스로 국제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화 개선에 공헌할 수 있게 할 것, (2)지원 대상국과의 관계강화, (3)미국, 호주 등의 능력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국가와의 관계 강화, (4)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⁷¹ 세 번째 목적이 명시됨으로써 능력구축지원은 Quad 협력과 연결되는 대중 견제 정책적 기능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 목적에 주목해 보면, 미일동맹 강화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ASEAN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과

¹⁶⁸ 이승희·김지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일본비평』, 27호(2022), pp. 345-346.

¹⁶⁹ 「日 ASEAN 防衛協力」,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dialogue/j-asean/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¹⁷⁰ 「能力構築支援事業」,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cap_build/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¹⁷¹ 이승희·김지영, 2022, pp. 346-347; 「防衛省・自衛隊による能力構築支援(平成28年度版)」,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cap_build/common/pdf/cap_build_j.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ASEAN 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네번째 ‘신뢰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동남아 외교에 있어 후쿠다 독트린 때부터 계속 일본이 중요시해 온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능력구축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지원의 시작은 2012 년 8 월 비전투 분야의 기술지원이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지뢰 제거와 의료 등의 비전투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능력구축사업 시행 당시인 2012 년에는 군사 분야에서의 지원을 금지한 ODA 법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예산은 방위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2015 년 ‘개발협력대강’이 각의 결정되어, ODA 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능력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방위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¹⁷²

양자협력으로는 방위장비·기술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베 정권 시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각서 서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라오스, 말레이시아와의 안보·방위 협력도 실현되었다. 남중국해 분쟁 등 군사적 갈등을 겪기 시작한 ASEAN 국가들에게 있어 Quad 국가들이 제공하는 능력구축훈련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되어, 방위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¹⁷² 이승희·김지영, 2022, p. 347.

[표 7]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및 안보·방위 협력 문서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안보·방위 협력 문서
인도네시아		2015년 3월: 각서 서명
베트남	2019년 7월: 일-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교섭 개시에 합의	
필리핀	2016년 2월: 서명 2016년 4월: 발효	2015년 1월: 각서 서명
타이		2019년 11월: 각서 서명
라오스		2019년 10월: 각서 서명
말레이시아	2018년 4월: 서명, 발효	2018년 9월: 각서 서명

출처: 방위성, 『防衛白書 2021 資料編』, 資料 29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21/html/ns029000.html.

3) 경제협력

2015년 2월 아베 내각은 ‘정부개발원조대강’(소위 말하는 ‘ODA 대강’)을 12년만에 개정하였다.¹⁷³ 구 ODA 대강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가에 대한 지원, 민간 투자 등 대상 범위와 협력 방법을 넓히며, 명칭도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익 확보에 공헌한다’는 표현도 추가되어, 앞으로 일본이 전략적 중요성을 우선하면서 대외 원조를 진행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본래 일본의 ODA 정책은 군사적 목적의 자금 공여 및 물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2014년 개발협력대강 개정 이후 군사적으로도 ODA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¹⁷⁴ 즉, ODA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일본의 국익의 개념

¹⁷³ 『日本經濟新聞(Web)』, (2015년 2월 10일), 「「国益確保へ貢献」 政府が ODA 大綱を改定」,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09H83_Q5A210C1MM0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¹⁷⁴ 이승희·김지영, 2022, p. 342.

이 경제적 이익에서 안전보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경제의 안보화가 가속화했다. 후쿠다 독트린에서 이어지는 일본의 대 ASEAN 외교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ODA 외교를 필두로 한 경제협력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분야이다. 따라서 이 ODA 대강 개정으로 인해 대 ASEAN 경제협력도 안보협력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정부개발원조대강의 개정으로 인해 법적 제약이 실질적으로 철폐되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방위 물품 지원의 수혜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이었는데, 이들 국가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¹⁷⁵ 베트남의 경우 일본이 2015년 중고 순시선 6 척을 베트남에 무상제공했다.¹⁷⁶ 이어서 2017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안보·방위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목적 하에 엔 차관 공여를 약속하였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방위 물품 지원은 2016년 11월에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순시선 등을 ODA 자금으로 공여하는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¹⁷⁷ 이는 말레이시아의 요청을 반영해 체결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같은 해 3월 중국 해경국 대형 순시선과 함께 중국어선 100 척이 말레이시아 EEZ에 침범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필리핀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ODA를 통해 순시선 공여와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¹⁷⁸ 일본 입장에서 ODA 사용이 중국 견제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며, 특히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 분쟁이 격화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ODA를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연관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¹⁷⁹ 즉, ODA 대강 개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 능력 및 국방력 강화를 경제적 측면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베 내각의 대 ASEAN 경제협력은 안보협력과 연결되면서 중국 견제 정책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 ASEAN 경제협력에는 중국 배제와 또 다른 의도가 존재한다. 즉, ASEAN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토대로 중국과의 협력 방향도 동시에 추구했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역점 변화가 일어난 2018년 이후 아베는 ASEAN의 중심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부분적인 협력을 모색하면서 중국의 변

¹⁷⁵ 이승희·김지영, 2022, p. 343.

¹⁷⁶ 이승희·김지영, 2022, p. 343.

¹⁷⁷ 이승희·김지영, 2022, p. 343.

¹⁷⁸ 이승희·김지영, 2022, p. 334.

¹⁷⁹ 이승희·김지영, 2022, p. 334.

화를 추동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끌어들이는 협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라고 할 수 있다.¹⁸⁰

ASEAN 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2010 년대에 들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ASEAN 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00 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3분의 1 이하였지만, 2016 년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수출입 금액을 기록하여 ASEAN 의 최대 파트너가 된 것을 알 수 있다.¹⁸¹ 특히, 중국과 ASEAN 과의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대일로 전략이다. ASEAN 주변 해양은 중국에 있어도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ASEAN 에 대한 인프라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 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에 적극적이다. ASEAN 입장에서 중국은 안보 상의 중대한 우려 사항임과 동시에 경제적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은 일대일로와 밀접한 관계인 ASEAN 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방법 모색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 45 주년인 2017 년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 시기부터 일대일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17 년 5 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여 매우 고무되었다. 그리고 2017 년 6 월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에 참석하여,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협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¹⁸² 다만, 아베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투명성, 공정성 등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의 반영이 협력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¹⁸³ 즉, 일본은 일대일로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보여주고 중국과의 부분적 협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국제질서에 중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¹⁸⁰ 北岡伸一, 「インド太平洋構想 自由と法の支配が本質」, 『読売新聞』, (2018 년 12 월 17 일) 재인용: 조은일, 2020, p. 92.

¹⁸¹ 福井孝敏, 「一帯一路とアジア・日本」(2018 년 3 월), 環日本海經濟ジャーナル No. 98, https://www.near21.jp/kan/publication/journal/98/98_3.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¹⁸² 『日本經濟新聞(Web)』, 「首相、一帯一路に協力姿勢 公正さ条件」(2017 년 6 월 5 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05H5L_V00C17A6000000/,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¹⁸³ 쉬창원, 「중-일의 ‘일대일로’ 협력 탐구와 제 3 차 시장 공동 개척」(2018 년 6 월 1 일),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29916&mid=a20200000000&board_id=4,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2017년 6월에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아베 총리와 시진핑은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제3국 시장에서의 중일 민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양국이 합의하였다.¹⁸⁴ 그리고 2018년에 들어 중일 관계의 개선 조짐이 보이면서, 양국은 일본의 FOIP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2018년 5월 중일 평화우호기념 4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리커창(李克強) 수상은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양자는 제3국 시장에서 중일 기업이 인프라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 포럼을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¹⁸⁵ 동년 9월에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은 재확인되었다. 이어서 9월 말에 베이징에서 ‘중일 민간 비즈니스 제3국 전개 추진에 관한 위원회’가 개최되고, 10월에는 아베 총리가 제1차 ‘중일 제3국 시장 협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다. 국제회의를 빼고 일본 수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약 7년만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중국 방문 기간 중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일대일로는 잠재력이 있는 구상으로, 일본은 제3국 시장 공동 개척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으로써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¹⁸⁶ 또한 포럼 개최와 함께 양국 정부·기업 간에 인프라, 소송, IT, 금융 등 분야에 관한 총 52개의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¹⁸⁷

이렇듯 중일 양국은 제3국 시장에서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공통의 목표로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여기서 ‘제3국 시장’으로 일본이 상정했던 것이 바로 동남아국가다. 2018년 10월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¹⁸⁴ 「日本国外務省及び経済産業省と中華人民共和国国家發展改革委員会及び商務部との間の第三国における日中民間経済協力に関する覚書」(2018년 5월 9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3987.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¹⁸⁵ 「李克強・中国国務院総理の訪日 日中首脳会談及び晩餐会」(2018년 5월 9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c_m1/cn/page1_000526.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¹⁸⁶ 최이락, 「일본,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새 중일관계 모색한다」, 『연합뉴스』(2017년 12월 3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231014400073>; 김외현, 「아베 중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 뜻...“협력의 파트너” 밀착」, 『한겨레』(2018년 10월 26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30065?sid=104>,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재인용: 임경한, 2019, p. 98.

¹⁸⁷ 「第1回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を開催」(2018년 10월), JETRO, https://www.jetro.go.jp/jetro/topics/2018/1810_topics11/,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포럼'에서 아베 총리는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중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태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예를 들어, 태국은 EEC(동부 경제 회랑)라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일 및 태국 기업은 EEC 의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 기업을 다수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국 프로젝트 사례는 아베가 제 3 국으로 ASEAN 국가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 방법 모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일대일로와 협력하면서 ASEAN에서 개방성, 투명성 등 국제 수준에 준한 인프라 정비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에는 ASEAN 고속도로망 등 지역 전체 프로젝트에 더해 ASEAN 국가 각자의 인프라 정비 계획이 존재한다. 일본은 냉전 종전 이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90년대에는 일본의 대 ASEAN 지원규모는 주요 지원국 중 최대를 기록하였다.¹⁸⁸ 그리고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ASEAN 3 개국을 선택하여, 1 년 이내에 모든 회원국을 방문하면서 ASEAN 중시 정책을 추진했다. 2017 년 11 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은 2018 년부터 ASEAN 과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경제협력협정(ASEAN-Japan Close Economic Partnership, AJCEP) 체결을 발표하였다.¹⁸⁹ 또한 11 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11 개국이 2019 년부터 TPP 를 발표할 수 있게 베트남과 함께 합의 형성을 주도하였다.¹⁹⁰

¹⁸⁸ 「日本政府のASEANに対する取り組みを聴く」(2021년 1월 7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1/0107_05.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¹⁸⁹ 이기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국가안보와 전략』, 제 18 권 1 호 (2018), p. 182.

¹⁹⁰ 이기태, 2018, p. 183.

따라서,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다자안보협력은 처음에는 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인 ‘능력구축지원사업’을 통해 ASEAN 국가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큰 목적이었으며, 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ASEAN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매개로 중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를 본 연구는 헤징 전략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시기에 미중 갈등이 특히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야기한 미국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미중 대립에 대한 ASEAN의 입장을 살펴보고, 일본의 헤징 전략이 ASEAN 이익과 일치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3. 일본 FOIP 에 있어 ASEAN 이 가지는 중요성

1) 안보적 관점

일본은 대동남아 외교에 있어 ASEAN 의 일체성과 중심성 강화에 일본이 기여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 다자 차원에서는 두 개의 비엔티안 비전을 통해, ASEAN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과 동시에 ASEAN 의 중심성과 일체성을 지원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능력구축지원사업을 양자간 및 다자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일본의 대 ASEAN 안보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 4 장, 5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안보전략에 있어 ASEAN 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엔티안 비전에 따라 진행되는 법의 지배와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일본의 ASEAN 지원은 대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구축지원사업은 ASEAN 에서 법의 지배를 확대하며 미국 및 Quad 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2018 년쯤부터 Quad 의 배타적인 성격이 약화되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보다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으로 변화되면서, Quad 국가 안에서 ASEAN 의 중심성 및 연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에 있어 ARF, ASEAN+3, ADMM-Plus 등 다자간 안보대화 자리에서의 ASEAN 의 중심적인 역할 즉, ‘ASEAN 의 중심성’은 미국과 중국의 연결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대 ASEAN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이러한 ASEAN 의 일체성과 중심성을 강화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기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대동남아 외교

에 있어 신뢰성 향상을 우선시해 왔으며, 아베 정권도 ‘파트너십의 강화’와 ‘ASEAN의 중심성과 일체성에 대한 공헌’이 두 가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즉, 안보·방위 협력과 지원을 통해 ASEAN의 중심성을 유지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신뢰성과 존재감을 증가시키려고 하였다.

ASEAN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맥락에서 비엔티안 비전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일본은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지배’에 의거한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ASEAN과의 안보협력은 이의 구체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 ASEAN 안보협력은 미국 중심 질서를 확보하고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와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 능력 및 국방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⁹¹

2) 경제적 관점

더 나아가, ASEAN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ASEAN과의 협력 강화는 미일 관계에 더하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과 ASEAN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베 내각의 두 가지 의도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ASEAN 국가의 해상안보 능력 강화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해양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을 견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아베는 ODA 대강 개정을 통해 대 ASEAN 경제협력을 안보협력과 연결시키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서 Quad와 비슷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ASEAN 협력은 ‘일대일로’를 둘러싸고 Quad와 다른 태도도 발견된다. 즉, 또 하나의 방향으로 ASEAN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가지고 중국 배제가 아닌 중일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일 협력은 2017년부터 2018년에 들어 크게 발전했으며, 아베는 ASEAN에 대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중국 일대일로 전략

¹⁹¹ 이기태,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4권 0호 (2016), pp. 135~160. 재인용: 이승화·김지영, 2022, p. 335.

과의 협력 방법 모색했다. 그리고 ASEAN 에서 개방성, 투명성 등 국제 수준에 준한 인프라 정비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대 ASEAN 경제협력에는 포괄적인 다자안보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SEAN 주변 해양은 중국에 있어도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ASEAN 에 대한 인프라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 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부 ASEAN 국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인해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에 대해 안보 면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ASEAN 에 있어 중국은 안보 상의 중대한 우려 사항임과 동시에 경제적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본은 안보·방위와 경제 두 가지 접근을 통해 Quad 협력과 중일 협력을 아우른 대외 정책을 전개했다.

4.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의 입장과 일본의 해징 전략

1)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관점(AOIP)’ 발표

2010 년대 ASEAN 국가들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대국 간 사이에서 어떻게 ASEAN 의 일체성 및 중심성을 유지할지’가 하나의 컨센서스(consensus)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⁹² 오바마(Barack Obama) 정권이 되어, 미국은 ASEAN 과의 정치적 관계를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ASEAN 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환영했다. 다만, 2012 년부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관여 강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존재했

¹⁹² 大庭三枝, “第6章 「インド太平洋」の多様性:ASEAN からの視点,” 国際問題研究所 『平成 30 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 インド太平洋地域の海洋安全保障と『法の支配』の実体化に向けて 国際公共財の維持強化に向けた日本外交の新たな取りくみ』(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9 年 10 月 31 日), p. 87.

다.¹⁹³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점치 강경 자세가 보이기 시작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ASEAN은 경제와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과도하게 문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ASEAN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했다. 즉, 제 5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ASEAN 국가들에 있어 중국의 접근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보 상의 우려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대중국 외교는 더욱 복잡화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대국 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기에 ASEAN 국가들은 미국 중국 양국과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원하고 있다.¹⁹⁴ ASEAN 국가 및 ASEAN 전체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전략 환경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ASEAN에 관여하여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도, ASEAN의 일체성과 중심성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갈등 심화는 ASEAN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ASEAN은 2019년 6월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관점(AOIP)’를 채택했다. 이로써 인도-태평양 협력이 ASEAN 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AOIP 작성에는 해양전략에 큰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작성을 주도하였다.

AOIP는 총 5쪽으러 구성되어, ①배경과 근거(Background and Rationale), ②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의 견해(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③목표(Objectives), ④원칙(Principles), ⑤협력분야(Areas of Cooperation), ⑥메커니즘(Mechanism)의 6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⁹⁵ ①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면서 “상호 불신, 오산, 제로섬 게임적 행동을 패턴 등 심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ASEAN이 인도태평양의 지역 협력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심적 역할을 취해

¹⁹³ 庄司智孝, “ASEAN의 「中心性」 --域内・域外關係の視點から--,” 『防衛研究所紀要』, 第17卷第1号(2014년 10월), p. 117.

¹⁹⁴ 庄司智孝, 2014, p. 118.

¹⁹⁵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2019년 6월),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1/01/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야 한다고 논하였다. ②에서는 인도태평양을 (1)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지역, (2) 모두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 (3) ASEAN 이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SEAN 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다음 ③, ④는 주로 ASEAN 이 제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해 필요한 4 가지 목표와 주요하는 원칙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ASEAN 은 ASEAN 의 중심성, 포괄성,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등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⑤에서는 아웃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해양협력, 연계성(connectivity), 유엔 SDG2030, 경제 및 기타 협력 분야가 제시되었다. 마지막 ⑥ AOIP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EAS 와 같은 기존의 아세안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¹⁹⁶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웃룩을 통해 가장 강조된 것은 ‘ASEAN 의 중심성’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발표된 AOIP 에는 ASEAN 이 미중 대립의 장소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¹⁹⁷ ASEAN 은 주요 대국과 안정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ASEAN 도 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유력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대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개되는 것으로 인해 ASEAN 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저하되지 않는지가 ASEAN 국가 간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행동 증가와 일대일로 구상의 등장에 의해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예컨대, 2015 년 11 월 개최된 ADMM Plus 회담 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문구를 공동성명 안에 넣을지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여, 결과적으로 의장국 말레이시아는 공동성명 발표를 포기하였다.¹⁹⁸

이 경향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대중 강경책을 내세워 더욱 현저해졌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의 정례화, 군사 연습의 확충 등 군사적으로 대중 견제 정책을 실행하였고, 수출 규제 등 경제 시장에서의 중국 배제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ASEAN 국가들은 아시아 공급망 및 ASEAN 의 경제적 역할 저하를 우려하였다.

¹⁹⁶ 오윤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 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 30 권 제 1 호 (2021), p. 93.

¹⁹⁷ 菊池努,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No.687 (2019), p. 4.

¹⁹⁸ 湯澤武, “ASEAN の秩序戦略とインド太平洋,” 『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レポート』(日本国際問題研究, 2022), p. 3.

이 미국의 중국 배제 정책의 결과, ASEAN은 미국 FOIP이 배타적인 구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트럼프가 Quad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우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중시한 것,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연속으로 결석한 것으로 인해 그 인식은 더욱 증대했다. 즉, 트럼프 정권에 들어 미국 안에서 ASEAN 중심성이 저하되면서, 미국에 대한 ASEAN의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미중 간 긴장이 경과되는 속에서 ASEAN은 AOIP를 제시하며, 미중 중심의 지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아울러 일본이나 인도, 호주 등과의 연대를 한 층 더 확대했다. 일본과는 냉전 이후부터 지속되는 경제적 협력 관계에 더하여, 안보나 법의 지배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인프라 정비에 있어도 일본은 과도한 중국 의존을 피하고자 하는 ASEAN 국가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즉, ASEAN은 일본에게 경제 뿐만 아닌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아베 정권의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는 ASEAN이 일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ASEAN의 우려와 일본의 헤징 전략

미일 중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입장은 안보, 경제, 가치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 비당사국(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¹⁹⁹, ‘안보’ 관점에서 ASEAN은 미일 주도 안보 강화를 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 ‘가치’ 두 가지 관점에 관해서 애매한 입장을 보여지고 있다. 첫째, 경제 관점에서 ASEAN과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ASEAN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일대일로 주요 지원 대상 국인 만큼, 미일 FOIP가 대중 경제안보적 역할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둘째, 가치 관점에서 FOIP의 보편적 가치 중 ASEAN 국가들은 미일의 내정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FOIP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민주주의’

¹⁹⁹ 배궁찬, “ASEAN의 역내 리더십 약화 문제: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21 (서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2016), p. 2.

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미일이 FOIP 을 통해 국내개혁을 요구하거나 Quad 가 대중 경쟁을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지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AOIP 에 ‘내정 불간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 은 ‘경제’와 ‘가치’ 관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Quad 를 중심으로 한 대중 경쟁 정책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ASEAN 이 기대하는 일본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다. ASEAN 에 있어 일본은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ASEAN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중 대립 영향을 최소화하고 ASEAN 의 중심성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적인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구한 아베 내각의 해징 전략은 이러한 ASEAN 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부상하는 대국 중국에 대해 경쟁 정책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모색하여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ASEAN 과 일본 양국에 있어 리스크 회피 수단이었다.

VI. 결론: 아베 정권기 다자안보협력 정책과 리스크 헤징

1. 미중 관계 속 일본의 리스크 헤징

1)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과 미중 ‘신냉전’

2017 년에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권은 일대일로 토대로 지역 영향력을 증대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과 중국 견제 의도를 점차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과거 정권과 다른 대중정책을 전개했다. 2017 년 말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은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명확히 밝히며, 이를 위한 대응적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⁰⁰ 2017 년 NSS 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군사적 위협과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및 저항, 양자간 무역 교섭을 통한 무역 적자 삭감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권은 대만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밝혔다.²⁰¹ 또한 2018 년 국가방위전략(NDS)은 미국의 번영과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제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현상변경 세력(중국, 러시아)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을 설명하였다.²⁰² 즉,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맞추며 대중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2017 년도 미국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정책 전환에 결과,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8 년 6 월 제임스 마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상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하여 “공통의 가치(common values)에 대한 코미트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⁰³ 그는 인도-태평양의 기초가 될 원칙으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존중, 공해 및 항공의 자유, 분쟁

²⁰⁰ 大庭三枝, 2019, p. 82.

²⁰¹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3 일).

²⁰²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19, 2018), 미국 방위성,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²⁰³ 大庭三枝, 2019, p. 83.

이 평화적 해결, 자유롭고 공정한 호혜적 무역과 투자, 국제 규칙·규범의 준수를 목표로 내세워, 동맹국이나 타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적 요소로 삼았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을 “주변 국가를 협박하여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²⁰⁴ 아울러, 2018년 10월 펜스 부대통령 연설도 트럼프 정부의 강경 자세를 보여준 사례다. 미중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 개혁개방 노선을 대부분 긍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시스템에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기대해 왔다.²⁰⁵ 이에 대해 펜스는 “과거 정권의 기대는 실수였다. 트럼프 정권은 전혀 새로운 접근을 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침해, 발전국에 대한 ‘채무의 덫’,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확대, 일본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위압적 행동, 민족 문제와 자유·인권 억압 등 예를 들며, 중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한 표현이 들어간 펜스 연설은 무역마찰을 둘러싼 경제·무역 분야 뿐만 아닌 군사·안보, 인권 등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정당화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국에 대한 ‘신냉전’ 선언으로 보는 평가도 등장했다.²⁰⁶ 무역이나 기술 패권 차원의 대응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고관세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3번 진행했고 2019년에는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²⁰⁷ 중국도 이에 대응함으로써 미중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사법성에 중국 산업·경제 스파이 행위를 대상으로 한 조사팀을 편성하기도 했다.²⁰⁸

²⁰⁴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October 4, 2018), The White House,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administrations-policy-toward-china/>,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²⁰⁵ 高畑昭男, “第2章 トランプ流「道義的現実主義」外交の展開,” 『トランプ政権の対外政策と日米関係(平成 29年度 米国研究)』(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8) p. 17.

²⁰⁶ 木内登英, 「米中新冷戦時代の始まりか」(2018년 10월 22일), NRI,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18/fis/kiuchi/1022>,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²⁰⁷ 『日本経済新聞(Web)』(2021년 1월 15일), 「米中関税合戦とは 18年7月から1年超続く」, <https://www.nikkei.com/article/DGXXKZO54391900U0A110C2EA2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²⁰⁸ 高畑昭男, 2018, p. 17.

2)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이러한 트럼프 시기 외교 정책 방향 변화는 일본에 있어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일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분담금의 증대나 동맹 역할 확대를 거론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일 양자 관계와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다자간 관계 양쪽에 영향을 끼쳤으며,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보다 복잡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미일 양자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공평한 무역 관계와 군사적 적자 해소를 호소하여, 경제적 이익 관점을 토대로 미일안보 관계를 재정 의하고자 했다. 그는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부담시키면서 방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하기도 하였다.²⁰⁹ 즉, 미일간의 동맹 위축이 우려되면서 미일동맹 관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²¹⁰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이래 미일동맹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아베 정권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헤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자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외교 차원에서의 다자주의 경시가 일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체협정(TPP) 탈퇴다. 트럼프 정권은 경제의 다자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실제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 TPP 탈퇴를 발표했다.²¹¹ 사실 일본 정부는 농업 부문에 가해질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TPP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왔는데, 2013년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TPP 협상 참가로 방침을 변경하였다.²¹² 경제적 다자협력을 통해 미국 요구에 대응하고 미일동맹을 확대하고자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기부터 아베 정권까지 오래 시간을 걸쳐 이를 논의해 온 만큼 미국의 TPP 탈퇴는 큰 충격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TPP 참여가 미일동맹 강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²⁰⁹ 何思慎·陳舜仁, “「同盟萎縮」: トランプ外交における東アジアの安全保障の變化”, 『問題と研究』, 第48卷3号(2019), p. 4.

²¹⁰ 동맹의 위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何思慎·陳舜仁, 2019>를 참고.

²¹¹ 『중앙일보』, 「트럼프, TPP 탈퇴 서명...보호무역주의 본격화」, (2017년 1월 2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67045>,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²¹² 박영준, 2018, p. 188.

미국의 불확실한 안보·경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대외정책 면에서 미국 일변도가 아닌, 보다 다원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여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중국 일대일로 협력 및 중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²¹³ 또한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 있어서의 미국 리더십 쇠퇴를 의미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3) 미국과 일본 FOIP 의 차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Quad 간 연대 강화가 공통 사항이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되어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과 다른 측면을 강조하며 다자안보협력의 다면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 FOIP 차이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 트럼프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FOIP 구상의 주요한 요소로 삼아 민주, 자유, 기본적인 권리 등 가치를 중요시한 반면 일본은 가치의 측면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ASEAN 의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²¹⁴ 미국과 달리 일본은 포괄적 FOIP 추진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했으며 의도적으로 가치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미국과 일본에는 다른 태도가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무역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은 FOIP 의 역점 변화가 일어나 대동남아 정책에 집중하기 시작한 후, 아베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병행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일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²¹⁵ 특히,

²¹³ 박영준, 2018, p. 192.

²¹⁴ 添谷芳秀, “日本のインド太平洋外交と近隣外交”, 『国際問題』 No.688 (2020), p.25.

²¹⁵ 小谷哲男, “第4章 アメリカのインド太平洋戦略:さらなる日米協力の余地,” 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報告 『インド太平洋地域の海洋安全保障と『法の支配』の実体化にむけて: 国際公共財の維持強化に向けた日本外交の新たな取り組み (令和元年度インド太平洋研究会)』 (国際問題研究所, 2021년 6월 7일), p. 66.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일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강한 위계감을 표출하여 대결적 자세를 유지했으나, 일본은 사실상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을 표명했다. 즉, 미국은 FOIP를 통해 일대일로를 대신하는 미국 질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일본은 일대일로에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을 감소하며, FOIP를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2016년 아베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FOIP는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임에 반해, 미국 ‘인도-태평양’의 범위는 인도보다 동쪽 지역이다.²¹⁶ 그리고 이같은 일본의 광범위 지향은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헤징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즉, 미중 경쟁이 격화되어 미국 및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한 결과, 일본은 글로벌 질서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헤징 전략을 전개했다. 일본 FOIP에는 대중 견제와 함께,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한 자리에서 일본의 역할을 모색하고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자율성’ 추구 의도가 존재했다.

2. Quad와 ASEAN 두 가지 협력 추구

1990년대와 비교해 보면, 2010년대 아베 정권 시기 다자안보협력은 그 내용 및 성격이 매우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는 유엔 PKO 및 ARF를 통한 국제사회공헌이 주된 내용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0년대에 들어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한 배타적인 소다자 안보협력 즉, Quad가 미일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아베 정권에 들어서 새로 제시된 대외전략이었다.

Quad는 3자 및 4자의 유형을 기반으로 한 대중국 안보 경쟁 전략인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중 견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Quad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중 경쟁을 격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따라서, Quad의 안보협력 발전과 경제안보의 대두로 인해, 2010년대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1990년대보다 배타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과거 다자안보정책의 중심이었던

²¹⁶ 大庭三枝, 2019, p. 83.

유엔 PKO 는 미일안보 강화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아베 정권 시기 대외전략의 변화 및 미일안보 강화로 인해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미일동맹에 포섭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ASEAN 과의 협력에 주목해 보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에는 미일동맹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는 배타적 성격과 동시에 포괄적인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발견할 수 있다. ASEAN 과의 다자협력은 1990 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2010 년대 인도-태평양 시대에 들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대중 경쟁 전략의 측면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범의 지배를 확대하며, 미국 및 Quad 과의 안보 방위·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SEAN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과 ODA 등 경제협력을 혼합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둘째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전략의 측면이다. 일본은 ASEAN 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일대일로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고,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력을 추구하였다. 즉, 아베 정권 시기 일-ASEAN 협력에는 1990 년대와 유사한 ‘포괄적’ 성격도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다자 안보협력 Quad’에 더하여 ‘일-ASEAN 협력’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다면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Quad 와 ASEAN 두 가지 협력을 추구하고자 한 아베 정권의 다자안보정책에 대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리스크 헤징으로 해석하였다. 일-ASEAN 협력을 경제적 관점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ODA 지원을 통해 ASEAN 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을 키우는 목적에 더하여,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ASEAN 과의 다자협력에 존재하는 포괄적 성격은 미중 대립 속 미국에 대한 리스크를 헤징하는 기능을 했으며, ASEAN 입장에서도 필요한 전략이었다. 즉, Quad 소다자와 함께 ASEAN 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시대에 들어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가 밝힌 일본 다자안보협력의 ‘다면적 진화’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함의를 제공한다. 일본의 다자안보협력 정책은 미일안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행위자 간의 다자 혹은 소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다중적(multi-layer)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로써 대국 간 경쟁에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미일 3

각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대중 균형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존재이며, 미중 대립이 장기화 되는 속에서 미국 중심인 안보 틀은 중국과 미국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아 국가, 인도 등을 협력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포괄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리스크 회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동맹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미국 이외 행위자와의 협력을 구축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다자안보협력 방향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I. 1 차 자료

1. 방위성 자료

- 『平成 4 年版 防衛白書』(1992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2/w1992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5 年版 防衛白書』(1993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3/w1993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6 年版 防衛白書』(1994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4/w1994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7 年版 防衛白書』(1995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5/index.html (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8 年版 防衛白書』(1996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6/index.html (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9 年版 防衛白書』(1997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7/index.html (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0 年版 防衛白書』(1998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8/index.html (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1 年版 防衛白書』(1999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9/w1999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2 年版 防衛白書』(2000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0/w2000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3 年版 防衛白書』(2001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1/w2001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4 年版 防衛白書』(2002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2/w2002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5 年版 防衛白書』(2003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3/w2003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6 年版 防衛白書』(2004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4/w2004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7 年版 防衛白書』(2005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5/w2005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19 年版 防衛白書』(2007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7/w2007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0 年版 防衛白書』(2008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8/w2008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1 年版 防衛白書』(2009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9/w2009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2 年版 防衛白書』(2010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0/w2010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3 年版 防衛白書』(2011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1/w2011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4 年版 防衛白書』(2012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2/w2012_00.html(최종검색일:2022 년 9 월 16 일).
- 『平成 25 年版防衛白書』(2013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3/w2013_00.html(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26 年版防衛白書』(2014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4/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27 年版防衛白書』(2015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5/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28 年版防衛白書』(2016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6/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29 年版防衛白書』(2017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7/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30 年版防衛白書』(2018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8/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令和元年版防衛白書』(2019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9/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令和 2 年版防衛白書』(2020 年),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20/pdf/index.html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16 일).
- 『平成 8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1995 年 12 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1996_taikou/dp96j.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平成 17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 年 12 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taiko.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平成 23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0 年 12 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1/taikou.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平成 26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 年 12 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平成 31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8 年 12 月),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20181218.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防衛計画の大綱の概要』(2018 年 12 月), <https://www.mod.go.jp/j/publicat/wp/wp2020/pdf/R02020302.pdf>,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5 일).
-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4.27) <https://www.mod.go.jp/j/approach/ampo/shishin/>,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28 일),
- 『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日 ASEAN 防衛協力イニシアティブ～のアップデート』(2019 년 11 월),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dialogue/j-asean/pdf/admm_plus_ewg_a.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3 일) .
- 『防衛省・自衛隊による能力構築支援(平成 28 年度版)』,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cap_build/common/pdf/cap_build_j.pdf, (최종검색일: 2022 년 11 월 28 일) .

2. 외무성 자료

- 『平成 26 年版外交青書』(2014 년 4 월),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2_001636.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8 일) .
- 『平成 29 年版外交青書』(2017 년 4 월),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228.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8 일) .
- 『平成 30 年版外交青書』, (2018 년 5 월),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5_001612.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8 일) .
- 『令和元年版外交青書』, (2019 년 4 월),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2_003299.html, (최종검색일: 2022 년 10 월 18 일) .
-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 년 12 월),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 (최종검색일:2021 년 9 월 28 일).
-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ヒジヨン・ステートメント(仮訳)』(201

- 3년 12월),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22446.pdf>
-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 実施計画(仮訳)』 (2013년 12월),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22448.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開発協力大綱について』 (2015년 2월),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2774.pdf>,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5일).
-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2015년 4월),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78187.pdf>,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28일),
- 『日本の安全保障-積極的平和主義』 (2016년 3월),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117309.pdf#page=4>,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5일).
- 『我が国の国連 PKO 活動の実績』 (2016년 6월), https://www.kantei.go.jp/jp/headline/pdf/heiwa_anzen/hakenjisseki_280615.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5일).
-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ree and Open Indo-Pacific)』 (2016년 8월), <https://www.mofa.go.jp/files/000430631.pdf>,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20일)
- 『日印首脳会談』 (2017년 9월),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4_003293.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 (2018년 9월, 2019년 1월 개정),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07642.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 『日印共同声明「自由で開かれ, 繁栄し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 (2017년 9월 14일),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290053.pdf>.
- 『"Confluence of the Two Seas" Speech by H.E.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22, 2007),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2022년 10월 13일).

3. 언론자료

- 『日本経済新聞(Web)』, (2013년 1월 18일), 「首相が東南アジア新5原則 中国をけん制」,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1803Q_Y3A110C1PP8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日本経済新聞(Web)』, (2015년 2월 10일), 「「国益確保へ貢献」 政府がODA大綱を改定」,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09H83_Q5A210C1MM0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日本経済新聞(Web)』, (2015년 5월 31일), 「日米豪、南シナ海「深刻な懸念」 中国をけん制」,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30H48_Q5A530C1PE8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日本経済新聞(Web)』, 「首相、一帯一路に協力姿勢 公正さ条件」 (2017년 6월 5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S05H5I_V00C17A6000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日本経済新聞 (Web)』, (2017년 6월 28일), 「米印首脳会談、「一帯一路」に懸念示唆 ビザ問題は触れず」,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GM27H5Q_X20C17A6FF1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日本経済新聞(Web)』 (2017년 10월 26일), 「河野外相「日米豪印で戦略対話」 貿易・安保、中国にらみ」,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22692990V21C17A0MM8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검색).
- 『日本経済新聞 (Web)』, (2018년 6월 11일), 「首相 インド太平洋地域へ3年で5.5兆円投融资」,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1618560R10C18A6MM8000/>.
- 『日本経済新聞(Web)』, (2018년 11월 13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7648990S8A111C1PP8000/>.
- 『日本経済新聞(Web)』 (2021년 1월 15일), 「米中関税合戦とは 18년 7月から1년超続く」,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54391900U0A110C2EA2000/>,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중앙일보』, 「트럼프, TPP 탈퇴 서명…보호무역주의 본격화」, (2017년 1월 2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67045>,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4. 수상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第百九十六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2018년 1월 22일),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80122siseihousin.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第百九十六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2018년 1월 22일),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80122siseihousin.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誕生秘話』(2021년 6월 30일) NHK 정치マガジン,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62725.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5. 가타 자료

내각관방, 『防衛装備移転三原則』(2014년 4월), <https://www.cas.go.jp/jp/gaiyou/jimu/pdf/bouei1.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p. 23, (2022년 10월 12일),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3일).

U.S.Department of Defens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January, 2018),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

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ASEAN 홈페이지.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019년 6월),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1/01/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II. 2차 자료

1. 국문

- 강태훈. 2003. “일본외교의 리더쉽 역할: 동남아 외교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권 0호.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편]. 2016.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안보전략』. 고양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관옥. 2012. “현실주의 외교안보전략으로서의 연성편승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 20권 1호.
- 김석수. 2019. “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세계지역연구논총』.
- 김성철. 2003. 『일본외교의 세계화 : 국제공헌의 진화적 발전』. 서울: 세종정책연구.
- 김태균. 2010.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일본 사례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지역연구』. 제 19권 2호 여름.
- 남창희. 2009. “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방위정책사의 轉機로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유엔 PKO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9집 12권.
- 류시현. 2015. “일본의 ODA 정책과 인간안보.” 『일본연구논총』. 41호.
- 박영준. 2014.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국방정책연구』. 제 30권 제 1호.
- _____. 2015.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해석.” 『아세아연구』. 제 58권 4호.

- _____. 2015.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신아세아』. 제 22 권 2 호.
- _____. 2018.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제 61 권 3 호.
- 박재적. 2019.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 제 23 권 1 호.
- 배궁찬. 2016. “ASEAN 의 역내 리더십 약화 문제: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권 21 호.
- 변창구. 2007. “일본의 동아시아 다자안보외교: 평가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 14 권 3 호.
- 손석의; 조비연. 2017. “일본의 미일동맹-유엔중심의 안보전략의 변용: 1990 년대 일본의 탈냉전기 국가정체성 재건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72 권 0 호.
- 송주명. 2009.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서남: 동양학술총서.
- 신범식, 2010.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 15 권 1 호.
- 양기웅; 안정환. 2017.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 전략적 관여와 헤징.” 『국제정치논총』. 제 57 권 1 호.
- 오윤아. 2021.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 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 30 권 1 호.
- 유용조. 2015. “일본 신안보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윤대엽. 2019.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아태연구』. 제 26 권 3 호.
- 윤도원. 2018. “대외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61 권 61 호.
- 이기태. 2019.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제 22 권 3 호.
- 이승원. 2006.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 이승희; 김지영. 2022.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일본비평』. 제 27 호.

- 이정환. 2016. “2000 년대 자민당 온건보수의 향방.”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일본과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선인.
- _____. 2016.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 ‘이익선’과 ‘인간안보’ 사이에서.” 『세계정치』. 제 24 권.
- 이종국. 2003. “전후 일본의 국제기구외교-유엔(UN)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9 권 제 1 호.
- 이지영. 2018.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 세기정치학회보』.
제 28 권 제 4 호.
- 이혜정; 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 22 권 1 호.
- 임경한. 201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제 22 집 제 4 호.
- 장인성. 2006. “일본의 국제책임과 "국제공헌": 국제체제와 일본의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 23 권.
- 전재성. 2003.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 43 집 1 호.
- 정구연; 이재현; 백우열; 이기태. 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Quad 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 23 권 제 2 호.
- 조양현. 2011. “제 3 장 일본의 다자협력과 제도화 전략.” 『JPI Re-
search Series』 23.
- 조양현[발표]; 외교안보연구소 [편]. 2018.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 년 12 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조은일. 2020.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 36 권 2 호.
- 토가시 아유미. 2017. “정권 교체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지속성:
정책이념과 미일동맹.” 『한국정당학회보』. 제 16 권 제 2 호.
- 한동만 외. 2002.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안보정책과.
- 한의석. 2017. “21 세기 일본의 국아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 57 집 3 호.
- 홍현익, 이대우.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 강』.
세종정책총서
- 崔天運(Cheon Woon Choi)·李相萬(Sang Man Lee). 2021. “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45 권 3 호.

2. 영문

- Fukushima, Akiko. 2009. "Japan's Perspective on Asian Regionalism." Michael J. Green and Bates Gill, eds. *Asia's New Multilateralism: Cooperation, Competition, and the Search for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h, Evelyn. 2005.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Policy Studies (East-West Center Washington)*. no.16.
- _____. 2005. *Betwixt and Between: Southeast Asian Strategic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_____. 2007.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Analyzing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3).
- Hughes, Christopher W. 2015.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Ishizuka, Katsuni. 2005. "Japan's policy towards UN peacekeeping operations." London, England: *International peacekeeping* . Vol.12 (1).
- Koga, Kei. 2016. "The rise of China and Japan's balancing strategy: critical junctures and policy shifts in the 2010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25 (101).
- _____. 2018. "The Concept of "Hedging" Revisited: The Case of Japan's Foreign Policy Strategy in East Asia's Power Shif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20 (4).
- _____. 2019.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okyo's tactical hedging and the implications for ASE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41 (2).
- _____. 2022. "Quad 3.0: Japan, Indo-Pacific and Minilateralism." *East Asian policy*. Vol.14 (1).
- Mochizuki, Mike. M. 2007.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 Oshiba, Ryo. 1999. "Japan's UN Policy in the 1990s." Oxford, UK: *Pacific Focus*, 14(1).
- Pyle, Kenneth. 2018. "Japan's Return to Great Power Politics: Abe's

- s Restoration.” *Asia policy*. Vol.13 (2).
- _____.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 Affairs.
- Samuels, Richard J.. 2006. “Japan's goldilocks strateg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29 (4).
- _____.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Togo, Kazuhiko. 2008. “Japan and the New Security Structures of Asian Multilateralism,” Kent E. Calder and Francis Fukuyama, eds. *East Asian Multilateralism: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Baltimore: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Multilateral Political Diplomacy: The United Nation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Japan's Foreign Policy, 1945-2009*. Brill, 2005. 373-402.

3. 일문

- 浅井一男; 等雄一郎. 2015. “新たな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その経緯と概要、論点—.” 『調査と情報』. 874.
- 尹奭相. 2009. “日本の安全保障概念の再構築に関する考察 -安全保障の地理的拡大と自衛隊活動の内容 深化—.” 『일본학연구』. 26.
- 猪口孝; G. ジョン・アイケンベリー; 佐藤洋一郎(編). 2013. 『日米安全保障同盟: 地域的多国間主義(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東京: 原書房.
- 今西靖治. 2014. “国連 PKO と平和構築 -日本外交にとっての位置づけと課題-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Japan's Peacebuilding Policy).” 『国際公共政策研究』. 19, 1.
- 五十嵐仁. 2017. “安倍政権と安保法制・憲法・外交・基地問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00.
- 小沢一郎. 1993.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 大芝亮. 2000. “一九九〇年代における日本の国連外交.” 『一橋論叢』. 123, 1.
- _____. (編). 2013. 『日本の外交 第5巻 対外政策課題編』. 東京: 岩波書店.
- 大庭三枝. 2019. “第6章 「インド太平洋」の多様性: ASEANからの視点.” 国際問題研究所 『平成 30 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

- 業 インド太平洋地域の海洋安全保障と『法の支配』の実体化に向けて 国際公共財の維持強化に向けた日本外交の新たな取り組み』．日本国際問題研究所．
- 大山貴稔. 2015. “「国際貢献」に見る日本の国際関係認識.” 『国際政治』. 180.
- 川島真; 遠藤誠治; 遠藤乾(編). 2015. 『チャイナ・リスク』(シリーズ日本の安全保障第五巻). 東京:岩波書店.
- 河辺一郎. 1994. 『日本と国連』. 岩波新書.
- 菊池努. 2019.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687.
- 北岡伸一. 2000. 『「普通の国」へ』. 東京:中央公論新社.
- _____. 2007. 『国連の政治力学: 日本はどこにいるのか』. 東京:中央公論新社.
- 木宮正(編). 2015. 『朝鮮半島と東アジア』(シリーズ日本の安全保障第六巻). 東京:岩波書店.
- 栗栖薫子. 2011. “現段階の「人間の安全保障」(「人間の安全保障」と対外政策).” 『国際問題』. 603.
- 小谷哲男. 2021. “第4章 アメリカのインド太平洋戦略:さらなる日米協力の余地.” 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報告『インド太平洋地域の海洋安全保障と『法の支配』の実体化にむけて: 国際公共財の維持強化に向けた日本外交の新たな取り組み(令和元年度 インド太平洋研究会)』. 国際問題研究所.
- 近藤重克. 2003. “新しい国際環境下の日米同盟関係:戦略対話の必要とその前提条件.” 『防衛研究所紀要』. 5, 2.
- 阪口規純. 1999. “湾岸戦争後の日本の安全保障論議に関する一考察: 小沢一郎・自由党党首の安全保障論を巡って.” 『国際公共政策研究』. 4(1).
- 佐々木芳隆. 1992. 『海を渡る自衛隊—PKO 立法と政治権力』. 岩波新書.
- 佐竹知彦. 2015. “安倍政権下の日本の防衛・戦略態勢.” 『国際共同研究シリーズ』. 12, 1.
- _____. 2018. “日本: 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 防衛研究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防衛研究所.
- _____. 2019. “中国の台頭と日米豪安全保障協力の強化—2000年代を中心に—.” *International Security*. 40, 4.
- 佐橋亮. 2017. “対外政策安全保障重視のアジア外交へ.” 竹中治堅(編), 『二つの政権交代:政策は変わったのか』. 東京:勁草書房.

- 清水奈名子. 2006. “冷戦後の国連安全保障体制 -人間中心的な安全保障体制へ.” 『社会科学ジャーナル』. 57 COE 特別号.
- 庄司貴由. 2015. 『自衛隊海外派遣と日本外』. 日本経済評論社.
- 庄司智孝. 2014. “ASEAN の「中心性」--域内・域外関係の視点から--.” 『防衛研究所紀要』, 17, 1.
- 信田智人. 2006. 『冷戦後の日本外交』. ミネルヴァ書店.
- 添谷芳秀. 2016. 『秩序変動と日本外交：拡大と収縮の七〇年』 (ProQuest Ebook Central),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_____. 2020. “日本のインド太平洋外交と近隣外交.” 『国際問題』. 688.
- 高須幸雄. 2011. “国連と「人間の安全保障」.” 『国際問題』. 603.
- 高橋哲哉; 山影進(編). 2008. 『人間の安全保障』. 東京大学出版会.
- 高畑昭男. 2018. “第2章 トランプ流「道義的現実主義」外交の展開.” 『トランプ政権の対外政策と日米関係(平成 29 年度 米国研究)』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手嶋龍一. 2006. 『外交敗戦-130 億ドルは砂に消えた』. 新潮社.
- 内閣官房内閣審議室分室, 内閣総理大臣補佐官室(編), “総合安全保障戦略:総合安全保障研究グループ (大平総理の政策研究会報告書)”, (東京: 大蔵省印刷室, 1980).
- 中山雅司. 1991. “冷戦後の国連と日本の国際貢献-国連協力論議の軌跡と国連中心主義のあり方をめぐって.” 『創大平和研究』. 13.
- _____. 2002. “国連平和維持活動の発展と現段階 -「人間の安全保障」的「平和活動」の模索-.” 『創価法学』. 32, 1・2.
- 本多倫彬. 2017. 『平和構築の模索:『自衛隊 PKO 派遣』の挑戦と帰結』. 内外出版.
- 福島安紀子. 2010. 『人間の安全保障-グローバル化する多様な脅威と政策フレームワーク』. 千倉書房.
- マイケル・シーゲル, ジョセフ・カミレーリ (編). 2006. 『多国間主義と同盟の狭間-岐路に立つ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 国際書院.
- 宮城大蔵(編). 2014. 『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 ミネルヴァ書房.
- 望月和彦. 1996. “ポスト冷戦期の国連 PKO と日本の安全保障”. 『総合研究所紀要』. 21, 3.
- 湯澤武. 2022. “ASEAN の秩序戦略とインド太平洋.” 『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レポート』.
- 何思慎・陳舜仁. 2019. “「同盟萎縮」:トランプ外交における東アジアの安全保障の変化.” 『問題と研究』. 48, 3.
- 林賢参. 2014. “第二次安倍晋三内閣の対中 ヘッジング戦略”. 『問題と研

- 究』. 43, 2.
- _____. 2018. “安倍内閣の東南アジア外交とインド太平洋戦略. 『問題と研究』. 47, 2.
- _____. 2019.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 競争から協調へ —.” 『일본학보』. 0, 121.

III. 참고 사이트

- 「平和安全法制の内容」.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5일).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2013-2014년, 전 7회) .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2>.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25일).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平成 26년 5월 15일). <https://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2/dai7/houkoku.pdf>.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25일).
- 「@PKO 나우! 第 2 回人間の安全保障」. 내각후 홈페이지. http://www.pko.go.jp/pko_j/organization/researcher/atpkonow/article002.html.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11일).
- 『ビエンチャン・ビジョン～日ASEAN防衛協力イニシアティブ～』,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dialogue/j-asean/vientianevision.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
- 「人間の安全保障」. 国際連合広報センター. https://www.unic.or.jp/activities/human_security/. (최종검색일: 2022년 9월 5일).
- Raghuvanshi, Vivek. 2015. 「Japan To Join Malabar as Permanent Participant」. Defense News(October 13).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15/10/13/japan-to-join-malabar-as-permanent-participant/>. (최종검색일: 2022년 12월 28일).
- Shinzo Abe. 2012.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https://www.project-syndicate.org/magazine/a-strategic-alliance-f>

or-japan-and-india-by-shinzo-abe?barrier=accesspaylog.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검색).

The White House. 2018.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administrations-policy-toward-china/>.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相澤輝昭. 2019. 「その後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変遷と展開」 p. 4.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 <https://www.spf.org/oceans/global-data/user33/20190627163005471.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神谷万丈. 2019. 「「競争戦略」のための「協力戦略」-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構想)の複合的構造」. SSDP(Society of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Studies). <http://ssdpaki.la.coocan.jp/proposals/26.html#fn18>.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木内登英. 2018. 「米中新冷戦時代の始まりか」. NRI.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18/fis/kiuchi/1022>.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神保謙. 1997.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多国間安全保障協力 —協調的安全保障・信頼醸成措置の限界性と ARF プロセス—」 P. 8. http://www.jiia.or.jp/pdf/asia_centre/jimbo_shuushi.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神保謙. 2018. 「インド太平洋戦略と沈黙する日米豪印クアッド協力」.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https://cigs.canon/article/20180613_5088.html,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16일).

武田紀久子. 2018. 「ペンス演説に見るトランプ政権の対中政策 ~海外インフラ投資強化と日本への含意~」. 国際通貨研究所. https://www.iima.or.jp/docs/column/2018/1023_j.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中山泰則. 2018. 「ペンス米副大統領演説のもつ戦略的意義」.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strategic_comment/column-320.html.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福井孝敏. 2018. 「一帯一路とアジア・日本」. 環日本海経済ジャーナル N

- o . 9 8 . https://www.near21.jp/kan/publication/journal/98/98_3.pdf. (최종검색일: 2022년 11월 28일) .
- 本多倫彬. 2020. 「平成時代の国際平和協力とその終焉—安倍政権の安保政策を振り返る (1)」.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https://cigs.canon/article/20201208_5520.html. 최종검색 일: 2021년 9월 16일).
- 松井一彦. 2007. “東アジアの安全保障と多国間協力 : A R F の意義と今後の課題.” 『立法と調査』 10. No.273.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07pdf/20071002023.pdf, (최종검색 일: 2022년 9월 11일).
- 쉬창원. 2018. 「중-일의 ‘일대일로’ 협력 탐구와 제 3 자 시장 공동 개척」 .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29916&mid=a20200000000&board_id=4. (최종검색 일: 2022년 11월 28일) .

Abstract

The Evolution of Japa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Era

NAKAMURA Momoe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Japa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era and its causes. In Jap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merged in the 1990s as a means of international contribution to UN diplomacy. Since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Law (PKO cooperation law) in 1992, Japan has actively promoted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dispatch to PKO and recognized it as a separate issue from Japan-U.S. security relations.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Abe cabinet, Japan's security policies have changed significantly while strengthening the Japan-U.S. alliance. This shift was also reflected 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inzo Abe advocated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s his new

foreign policy, and promot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India. The 2010s focused on the exclusive strategy through extending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Quad to deal with the rise of China whil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1990s showed a comprehensive foreign policy that was unintended to exclude certain countries or regions. This denotes the reinforcement of the Japan-U.S. alliance cooperation.

However, the comprehensive par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becaus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ASEAN has continued to strengthen even in the Indo-Pacific era. Japan-ASEAN security cooperation was developed in the 1990s when Japan participated in the PKO mission, and Abe also emphasized and tried to fost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in terms of both defense security and economic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Japa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2010s, this study has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n Quad and Japan-ASEAN cooperation, to revea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re is a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seeks to engage not only with the U.S., but also with China through Japan-ASEAN economic cooperation while an exclusive strategy is a core purpose.

Analyzing the role of Japan-ASEAN cooperation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security and economics, I have found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expand Japan's role in the global environment, particularly i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enhance its strategic independence. In this sense, this study confirmed the evolution of Japa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is evolution can be described as Japan's hedging strategy in the U.S.-China confrontation. By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both Quad and Japan-ASEAN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includes strategic independence, Japan has attempted to hedge its risks against the U.S. and China.

Keywords : Japa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be administration, Quad, Japan-ASEAN security cooperation, hedging strategy, Indo-Pacific Era

Student Number : 2020-23957